

2022년 제 1회 전라남도 평생교육 정책세미나

# 주민의 삶의질과 보편적 평생학습

2022년 4월 8일(금) 14:00~16:40  
나주시청 대회의실 / 온라인 ZOOM

# 목 차

1. 개 회 사	고석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3
2. 축 사	신민선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5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	7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8
3. 기조강연	김신일 (전 교육부 총리)	10
4. 세 미 나	최일선 (경희대학교 교수)	21
	홍숙희 (제주평생교육원장학진흥원전략사업 부장)	27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38
	유정규 (의성미래교육지원 센터장)	48
	5. 토 론	좌장 양병찬 (공주대 교수)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71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77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연구실장)	81
	양효정 (순천시 평생교육 과장)	84

# 축사

개회사 | 고석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축사 | 신민선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정찬균 나주시부시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개회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석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이른바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책세미나, 그 첫 장을 엽니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에 개원하였고, 지난 2020년 7월 1일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남장학회와 통합하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함께하는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전남 만들기” 라는 목표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진흥원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으로 주최하며 본 세미나 기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신민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김신일 전 교육부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 드리고, 평생교육이 제자리를 잡도록 평생의 사업으로 매진하고 계신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도 역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만하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나주시와 정찬규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경희대 최일선 교수님을 비롯한 네 분의 발표자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공주대 양병찬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불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보편적 평생학습권의 실현이란 시대적 과제에 크게 공감하시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본 정책세미나는 앞으로 세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1월 5~14일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9,2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7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집단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이처럼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 정비나 국가 책임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전국평생교육진흥협의회 등 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대 대선 과정에서 평생교육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지방선거에서나마 이슈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정책세미나는 그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시작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이성을 가진 성인들이 인류를 학살하는 나치즘과 같은 체제를 지지했고, 급기야 세계전쟁까지 일으켰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인하여 어리석은 전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면서 여전히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조차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작 북한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계층, 성, 나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학습이 이와 같은 헌법적 권리라는 원론적 이유 외에도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해소에 있습니다. 진영논리로 나뉘어 양분된 정치권도 그렇지만, 경제적 양극화, 최근에는 젠더 갈등까지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로 인한 갈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의 출발은 학교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야말로 태생적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완충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루가 달리 숨 쉴 틈 없이 바뀌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게 하여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평생교육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교육으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그 역할이 매우 큼니다. 20세가 넘으면 ‘성인’, 즉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랫말처럼 여전히 완성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백세시대를 맞는 지금, 신중년을 위한 제2, 제3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은 그래서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1회 정책세미나가 보편적 평생학습권 실현을 위한 물꼬를 터서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지방선거 최고의 이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진흥원의 최혜은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있을 세 차례의 세미나에도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8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석규 드림

## 【축사】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신민선

‘주민의 삶의 질과 보편적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1회 전라남도 평생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나주시와 공동 주관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화두를 던지며 세미나를 열자고 제안하신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고석규 원장님과 나주시의 적극적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기조 강연으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주신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김신일 전 부총리님께서서는 한국 사회에 공고히 자리 잡은 학교 중심 교육 패러다임을 평생애에 걸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학습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시고 학습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지향점과 철학을 견인하셨기에, 오늘 정책 세미나의 주제인 ‘주민의 삶의 질과 보편적 평생학습’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주제발표를 맡으신 최일선 교수님, 홍숙희 부장님, 구자인 대표님, 유정규 센터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 소멸시대의 평생학습 정책,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행정, 도농 격차와 생활권 평생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와 평생교육 등의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환기 정책이 요구되는 평생학습의 과제로써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사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활력의 핵심 전략으로써 평생학습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생활권 평생학습의 기반 조성 과 주민의 삶을 연계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을 위해 좌장을 맡아주신 양병찬 교수님과 패널로 참여하신 이해진 과장님, 김제선 원장님, 양효정 과장님, 양희준 실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제발표에 더욱더 풍성한 논의를 더 함으로써 오늘의 정책 세미나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층, 성별, 나

이,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명제하에 누구나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시대가 도래한 이후 20세에 마치는 교육으로 남은 80년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령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현실이 되는 시점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정책은 도농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평생학습 정책은 불가분한 관계로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와 해결 방안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 정책이 구상되는 시점이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에 더욱 오늘의 정책 세미나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는 1976년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평생학습 정책과 제도를 견인해가고 있는 명실상부 대표적 평생교육 단체입니다. 한국사회교육협회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함을 원칙으로 국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다각도의 연대와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평생학습 관련 주요 5개 단체와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대국민 공동 선언을 한 바 있고 전 국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6대 과제를 도출하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편적 평생학습의 실현이야말로 지역사회의 학습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하나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분열된 사회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학습 시민이 되기 위한 부단한 대화와 토론, 공론이 형성되는 장 마련에 우리가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의 이슈로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오늘의 정책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께 경의를 보냅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신민선 드림

### 【 축사 】



나주시 부시장  
정찬균

배꽃이 아름다운 4월의 나주에서 나주시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의 공동 주관으로 제1회 평생교육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터키 속담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미래를 설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속해서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이 학습하고 성장하여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그리고 도시를 변화시킬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평생교육 기관들과 소통하고 협업해 시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학습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서로 간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민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교육부 지정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이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특별상’ 과 전라남도 평생학습 평가에서 ‘우수상’ 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함께 해주신 평생교육 관계자분들의 덕택이며, 시민들이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포용과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인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지원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교육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원천인 에너지 교육을 중심으로 품격있는 미래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일상 속에서 배움이 삶의 가치를 더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나주시 부시장 정찬균 드림

## 【축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

제1회 전라남도 평생교육 정책세미나 주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해주신 고석규 원장님, 신민선 회장님, 정찬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 강연으로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님을 모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일선 교수님, 홍숙희 부장님, 구자인 대표님, 유정규 센터장님의 주제 발표가 저도 무척 기대됩니다.

이혜진 과장님, 김제선 원장님, 양효정 과장님, 양희준 실장님께서도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주민의 삶의 질과 보편적 평생학습에 관한 현장의 고민과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나아가 인류의 문명 전체가 큰 전환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기반 기술이 산업과 경제는 물론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과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학교가 새로운 문명과 더불어 변하고 있고, 더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노동과 분리되어 학교에 갇혀 있던 가르침과 배움이 우리 삶터와 일터로 다시 긴밀하게 연결되는 전환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 학습사회, 평생학습이라 부르는 전환입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이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주민의 삶과 밀착된 가르침과 배움의 여러 측면을 주제로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 다수가 이촌 향도하여 근대화를 이끈 전라남도는 이제 우리나라 장수혁명의 중심지입니다. 장수혁명 시대 평생교육 정책을 전라남도에서 활발하게 제안하고, 실천하고,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또,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6월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정책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공론장을 함께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 드림

# 기초 강연

주민의 삶의 질과 보편적 평생학습



기조강연

# 주민의 삶의 질과 보편적 평생학습

김신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shinil@snu.ac.kr

## 한국의 위상과 삶의 질

# 1

# 한국은 부국



**30-50 클럽**  
국민소득 1인당 3만(30 K)달러 이상, 인구 5천만(50 mil)명 이상,  
한국 2021년에 7번째로 가입



**32번째 선진국**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



**GDP / 세계 11위**  
한국의 국가경제력(GDP) 세계 11위

## 한국의 위상과 삶의 질



**2021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한국은 146개국 중 61위.  
우루과이(31), 멕시코(35), 우즈베크(41), 칠레(42), 필리핀(60).

**행복지수**

1인당 GNP, 건강 기대수명, 주변의 관심과 지원

**OECD국가중 최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 사회적 관대함, 부패수준.

**자살율**

유엔 세계보건기구 2021년 발표  
**한국은 세계 4위로 높아**

노년층 자살율이 특히 높아 1 준비없이 노년기에 진입 1 사회제도 대책 부족, 청소년층 역시 세계 평균 이상의 자살율 과다한 경쟁교육, 취업경쟁, '이생만'.

**인구감소**

**사상최초 감소(2019)**  
합계출산율 0.84(2020).

당분간 국제유입으로 유지하나 2025년 또는 2028년부터 감소 예측.

## 2. 삶의 질은 낮아

## 한국의 위상과 삶의 질

## 3. 정치는 후진

사회적 대립, 불신, 증오를 조정하고 해소시키기 보다, 오히려 증폭시키고 이용하는 포퓰리즘에 몰두.

### 포퓰리즘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 '나쁜 생각'으로 규정하고 공격. '정당주의 교육'의 폐해.

### 다른생각은 공격



**강력한 중앙집권, 약한 지방분권. 지방의 중앙 종속.**

### 세계화시대, 배타적 정책

세계화 시대, 귀화자와 미등록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55만명, 전 국민의 약 5%)에 대한 배타적, 부정적 태도와 정책.

## 한국의 위상과 삶의 질

###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은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향상된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장치와 시스템이  
해마다 50%씩 더 빨라지고 더 싸진다”

인력수요감소는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은 로봇이 사용률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비정규직 직무의 50%이상 로봇으로 대체.  
속연도가 증가하지 않는  
비학습형 직무종사자가 1/3로 OECD 최고.



# 4. 변혁의 시대 위기의 시대

## 한국의 위상과 삶의 질

### 과도한 개발에 의한 생태계 위기와 반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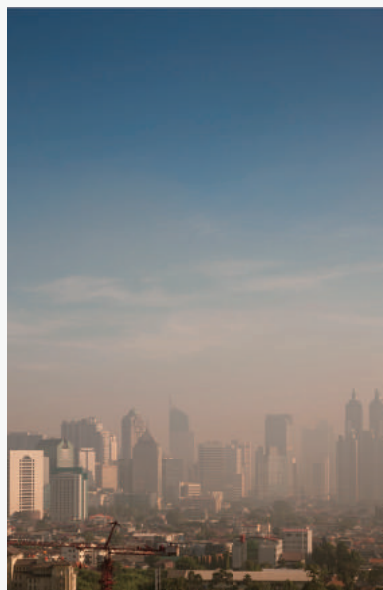
#### 경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보다 1.5도 상승하  
면 회복불가능한 재앙 맞는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40  
년에 1.5도 넘는다.” “RE 100”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2021),

#### 인수공통감염병 속출

싸스(2002),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코로나바이러스(2019).  
기술발전 속도 만큼 파괴되는  
생태계의 반격 속도도 단축되고 있다.



# 4. 변혁의 시대 위기의 시대

## 한국의 위상과 삶의 질

### 집단간 양극화와 이기주의.

국가간 집단간 양극화와 이기주의.  
경제양극화 확대.  
부강국의 코로나백신 독점으로  
빈곤국 접종률 10% 미만.  
세네갈 등의 원조 백신 쓰레기, WHO의 무기력.

사회활동과 생활의 비대면화.  
사회, 경제체계의 작동방식 변화로 양극화 극대화. 한  
국은 상위10%의 소득이  
하위50%의 14배, 서유럽국가들은 7~10배  
(세계불평등연구소, 2021).



## 4. 변혁의 시대 위기의 시대

## 한국의 위상과 삶의 질

### 신분제도(계급상속)의 대체가 아니라 대용역할 교육제도

새로운 의문을 촉발시키고 존중하는 살아있는 학습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정답을 반복 학습시키는 입시준비 경쟁교육.  
500년전 율곡 이이("9도장원공")가 겪은 일이 그대로 계속.

"과거 준비하며 배운 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부는 그 뒤에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타율적 학습을  
강요하는 교육에 집중하고

성인기의 학습은  
경시하는 교육제도와 정책.

## 5. 교육도 문제



## 새로운 교육 시대

### 평생학습시대

과학기술 발달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속교육과 학습 요구의 증가.

고령화와 인구구조변화에 의한  
노동인구구성 변화, 성인기 이후  
직업과 사회생활 위한 학습요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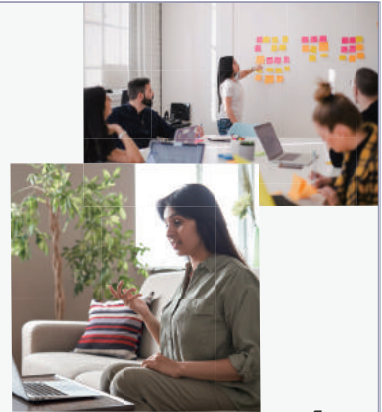
산업국가 시대에  
청소년기로 종결하는  
학교교육으로부터  
생애전체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의 시대로 진입.

시대적 경향은 청소년기 교과지식 위주  
학교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전생애에 걸쳐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평생학습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학습사회의 건설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나라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학습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유엔의 목표

“2030년 까지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증진시킨다”.  
(2015년 인천 선언)



1.

## 평생학습 요구

## 새로운 교육 시대

## 2.교육과 학습

교육은 누군가에게 학습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감독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특히 어린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대부분 학습하지만,  
그러면서도 가르침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력으로 많은 학습을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보다는 **성인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스스로 학습한다.**

‘아동교육’(PEDAGOGY)과 ‘성인교육’(ANDRAGOGY)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은 지도와 감독에 의한 타율적 학습과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자율적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흔히 교육이라 부르는 것이고 학교가 관리하고, 후자는 흔히 자기주도적 학습이라 부르는 것이고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권력과 교육제도에 의하여 대부분의 학습이 교육에 종속되었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확대되고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세기의 특성은 '학습시대' 또는 '학습사회'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 새로운 교육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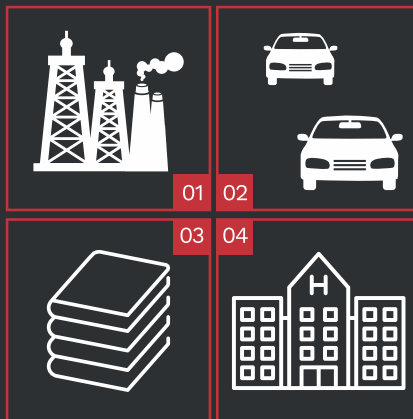
### 3. 학교교육의 특성

#### 발달배경

19-20세기에 거의 모든 국가의 학교교육은 산업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장치로 발달

#### 타율적 학습

체험과 실행 보다 관념화된 지식의 암기 강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보다 교사와 학교,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타율적 학습.



#### 학습의 획일성에 중점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보다는 학습의 획일성에 중점을 둔다. 통일된 지식과 가치관을 '정답'으로 인정.

물리적, 사회적으로 현실사회와 유리된 환경.

성인기를 준비하는 종결교육으로 인식.

## 새로운 교육 시대

# 3. 학교교육의 특성

이러한 특성들이 한국의 학교제도에서 더 증폭되고, 몇 가지 특성들이 추가됐다.

입시준비가 주목적인 사교육이 번창하고, 그만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

사립대학 비율이 높고, 교육비재원의 대부분이 학생부담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학생수의 확보가 관건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최근에는 대학원진학을 까지 매우 높다.

대학입시가 중등 및 그 이하 교육을 강하게 지배하여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성인들의 학습무관심, 학습기피로 연결된다.

공교육이지만 교육비의 사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

성인인구 학습참여율, 독서시간, 성인의 IT기기 지적활용도 등이 OECD 하위이다.

## 학습사회

# 1. 학습사회 건설

누구나 평생 동안 언제나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평생학습을 기본인권으로 보는 의식이 확산되고 헌법에 명시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학습과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산업교육장, 지식관련 시설 등 사회내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고, 인터넷 등 IT 이용 원격교육도 활용.

교사, 학교에 의한 타율적 학습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존중하고 지원.

다양한 학습결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학습인증제도를 운영하여 학력과 각종 자격에 활용한다.

# 학습사회



평생학습시대 학교교육은 종결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기초단계로서, 학습에 대한 흥미, 학습방법의 습득, 문해력 등 기본지식과 기능의 학습과 함께, 관념적 지식의 암기 보다 감성, 사회성, 창의성, 가치관, 미적 감각 등을 강조한다.

유아기교육은 평생학습의 기초로서 지식교육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학습흥미, 감성, 사회성, 건강습관 등에 중점을 둔다. 한국, 유아기 공교육화 필요

여러나라에서 평생학습기능을 강화한 신 개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평생학습대학교' (LIFELONG LEARNING UNIVERSITY)를 운영.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호주 등 현장직결 실무중심대학 육성.

대학생 중 25세 이상 성인학생 점유율: 미국 55%, 스웨덴 50%, 영국, 캐나다, 호주 20~25%. 성인학생의 대학입학을 위한 별도의 선발방법:

성인학생의 대학입학을 위한 별도의 선발방법: 대학입시가 아닌 면담, 실기, 포트폴리오, 간단한 테스트 등으로 선행학습을 평가인정하여 입학 결정.

성인과 노인기의 교육과 학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고, 개인생활과 국가 및 지자체 정책에 반영한다.

각 지역은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과 기관의 상호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학습활동지원을 확대하는 학습도시의 건설에 정책 우선순위 둔다.

각 지역은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과 기관의 상호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학습활동지원을 확대하는 학습도시의 건설에 정책 우선순위 둔다.

순수한 개인적 목적의 학습비는 유료이되, 다수에게 필요한 공적 성격의 학습과 저소득층의 학습은 지원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지원은 현금지원, 세금감면, 낮은 이률 용자, 무상교육,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 지역사회 평생학습

# 학습사회

### 산업현장에 이어 생활세계의 학습장화

지역 평생학습관 (거의 모든 기초 지자체 운영), 동 단위 학습공간도 운영.

한국 | 226개 기초지자체중 188개 학습도시 (83%).

유네스코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 229개 도시 가입 (한국 49개 도시 참여)

나라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성격의 지역 학습장 운영



그런데, 한국의 평생학습 현실은 매우 어렵다.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개선되었다 하나, 여전히 낮다. 학력간, 계층간, 사업장규모간 학습참여 격차가 크고, 확대되고 있다. 학습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은 0.11%에 지나지 않고, 지자체의 상황도 열악하다.

# 학습사회

## 3. 보편적 평생학습

### 지방 지역사회의 변화

#### 조선시대

양반사족에 의한 지방 자치



####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파괴와 경제적 수탈



#### 산업화 시기

국가 경제성장 위한 경제적, 정치적, 인적 동원.



#### 민주화 시기

개인적 성장 공동체 복원 포용과 평등



#### 지속가능 시대

세계시민 생태계와 공존



# 학습사회

## 3. 보편적 평생학습

### 보편적 평생학습의 요건

- 전 생애 다양한 학습과 교육기회의 확대와 평등.
- 학습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 보장(유급 학습휴가 등).
- 학습 및 교육비 지원 위한 다양한 대책(무상, 바우처, 세금감면 등) 시행.
- 학습결과와 인증과 사회적 가치 인정.
- 평생학습지원체제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학습도시는 도시도 학습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활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 도시' 보다 시급한 것은 '스마트 시민' 정책이다.

이러한 교육체제와 사회의 큰 혁신을 위해서는 정권이 각성해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평생학습은 누구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동시에  
인생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필요한 것을 배우는 삶의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학습을  
생활화하여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문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평생학습자로 살아가는  
민주적 평생학습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사회에서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은  
교육 제도의 변화는 물론이고  
인력 제도, 자격 제도, 인재 양성과  
관리 방식, 사회적 선발 제도,  
나아가 사회 제도의 총체적 방식에도

# 학습사회

김신일 지음

**THANK YOU**

# 세미나

지방소멸시대의 평생학습 정책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행정

도농 격차와 생활권 평생교육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교육  
: 학습을 통한 지역과제 통합사례

전라남도 평생학습 정책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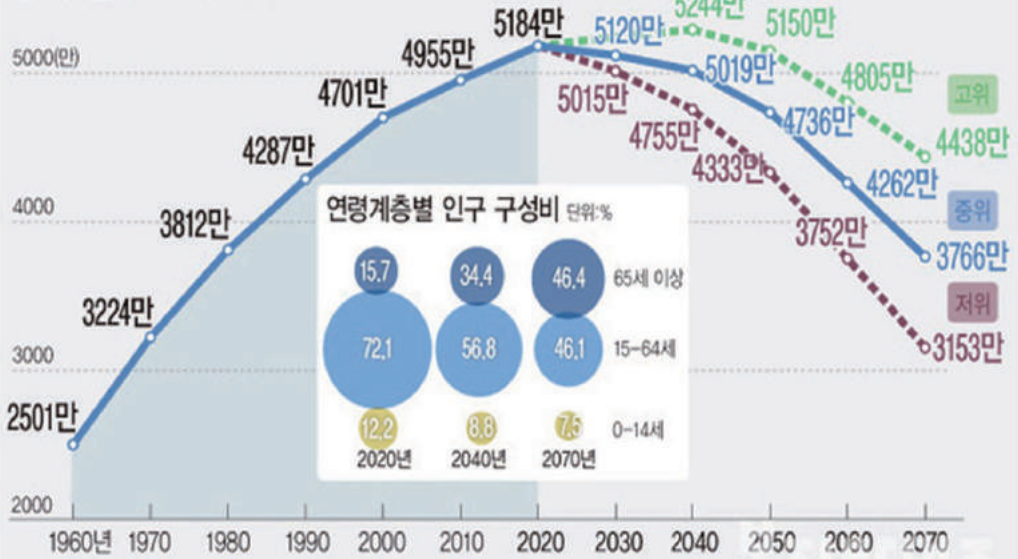
# 지방소멸시대의 평생학습 정책

최일선 | 경희대학교

인구  
소멸



장래 인구 추계 단위:명



자료: 통계청

# 2022년도 중앙부처 지자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정책분야별 22년 시행계획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계	가족	노인	주거	고용	교육	보건	기타
<b>2022년</b>	789,348	192,444	200,392	237,087	83,029	38,759	6,852	30,785
	100.0%	24.4%	25.4%	30.0%	10.5%	4.9%	0.9%	3.9%
<b>2021년</b>	726,799	179,874	189,095	232,197	92,872	8,533	6,081	18,146
	100.0%	24.7%	26.0%	31.9%	12.8%	1.2%	0.8%	2.5%

## 20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 영유아·아동

'22년 출생아 대상 영아수당 월 3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백만원 도입  
아동수당 확대 만 7세→만 8세 미만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 아동 양육부모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60만원→100만원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14만명/월8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7만명 지원  
저속계좌 10.4만명 지원  
주거 13.3만호, 임대주택 5.3만호 지원  
금융 8만 가구 지원

###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6천명) 신설 및 계속  
고용장려금 확대(23백명→30백명)  
노인일자리 확대(82만개→84.5만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50만명) 제공 등

### 전국민

상행수당 시범사업(6개 시·군·구)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40만명→50만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 지방은 소멸한다



## 서울공화국

프랑스의 파리와 일본의 도쿄

## 文 정부 수도권 집중 심화

- 2018년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 GTX 건설
- 2019년 2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용인
- 2021년 7월 K 바이오랩 허브, 인천 송도
- 2021년 7월 이경희 미술관, 서울에



## 20대 대통령선거

“지역균형발전은 없다“

# 소멸

에 몇 가지 생각



### 생물학적 소멸

“유성 생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생존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성을 창출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불사의 유전자 암호책을 후세에 전하는 유전자 운반체로서 금지를 가져야 할 우리들이 일회용에 불과한 존재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다.”(61)

### 자살

“이기적 자살은 사회가 사회 성원 전부를 모든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다. 따라서 그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뿐이다.” (484)

Durkheim, E. 자살론. (원서출판 1897)

### 근대적 인간의 죽음

“사유의 고고학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인간은 최근의 시대에 발견된 형상이다. 그리고 아마 종말이 가까운 발견물일 것이다.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 그 배치가 뒤엎리게 된다면, 장담할 수 있건대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 놓은 얼굴처럼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526)

Foucault, M. 말과 사물. (원서출판 1966)

### 호모 사피엔스의 죽음

인간의 본질적 규정이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도구적 인간’(homo faber).. 철학에는 뿌리 깊은 오류가 존재한다. 즉 그것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로 규정한 오류 ...”(115)  
“결론적으로 근대과학적 지식은 ... 노동과 오성 활동의 결합 속에서 성립되었다.(113)

히피터(2022). 하이데거의 사회론개론.

# 소멸

## 그리고



### 다양성

생물학적 소멸과 유전자의 생존전략 다양성



### 연대

자살의 치유 방법으로서 연대



### 평생학습대학

근대적 인간의 '죽음'과 대학의 운명



### 노동하는 평생학습 실천가

호모 사피엔스의 소멸과 호모 파베르 시대의 도래

# 평생학습



## 다양성의 평생학습

### 다양해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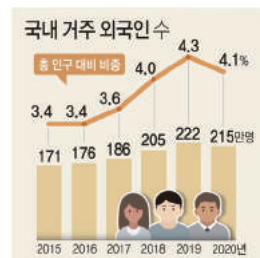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농업이주민 그리고 이들의 자녀  
고용허가제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생태계  
"이주노동에 기댄 대한민국 ... 이젠 인정할 때"

###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은 학교 중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한국어학급(유초중등)

### 다문화 평생학습

국내 거주 외국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과정과 정착 지원



자료/행정안전부 연방뉴스  
김계리 인턴 / 2021111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kuneey.kr/Le/N1

소멸 그리고 보편적 평생학습



## 農都 연대의 평생학습

### 전남 해남 북일초등학교

2011년 11월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작은학교살리기' 행위극 농촌 유학과 귀농 지원의 융합 장기 내임대주택, 귀농 귀촌 귀어 성공을 위한 멘토링 사업단

### 충북 옥천 청성초등학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 플랫폼 구축사업 청성초 교육이주자 및 산단 근로자를 위한 주거공급 및 청사산업단지 일자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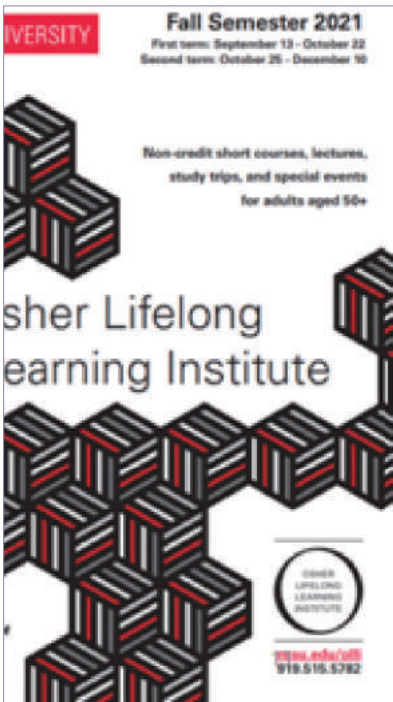


### 일본의 산촌유학

"입시전쟁터 같은 도시 학교에서 시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교육에 희망이 없다. 아이들과 자연이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나가노현 오오카산촌유학센터와 오오카초등학교 산촌유학의 기본정신은 자립하는 아이



수료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



## 평생학습대학

### 서울대 10개 만들기?

'학벌주의' 겨냥, 지역 거점국립대 9곳 모두 '국립 서울대학'으로, 서울대만큼 예산 투자해야. 지역사회 소멸 대안 질문엔 "지역 산업 살리는 필요조건은 지역에 세계적 대학 육성해야"

### 동의과학대학 미래평생교육사업단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 성인학습자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평생학습과정 운영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상생하는 미래형 평생교육 모델

### 미국의 Lifelong Learning Institute

대학 주변에 형성된 노인 평생학습관 회원 중 자원자가 강좌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조학습집단 학습을 매개로 한 대학과 은퇴층의 결합 모델



수료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



# 노동하는 평생학습 실천가

학습자에게 다가가는 지난한 시도들

변화하는 현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경험과 시행착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하고(labor) 실험하는(laboratory)  
호모 파베르적 인간으로서 실천가는 누구인가?



2022년 제1회 평생교육 정책 세미나  
; “주민의 삶의 질과 보편적 평생학습” 주제 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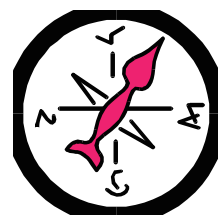
#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행정

2022. 4. 8.

홍 속 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주제발표 2, 논의 주제

1.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 환경
2. 평생교육 정책 전개과정과 현황
3.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시작과 특성
4.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역할
5. 국가와 지역평생교육 행정의 범위 적용 현황
6. 국가와 지역 평생교육 행정 체계의 현안 과제
7.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체계화 방안



# 1.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 환경;

## 시대적 요구에 못 미치는 정책 현황

- \*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 국가 단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수립(관계부처 합동, 2021. 7. 7.)
- \* 4차 산업혁명시대, 코로나 19로 인한 뉴노멀 환경의 도래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필요, 일상의 디지털화와 온·오프라인 융합 방식의 교육체계 도입
- \* 문명사적 전환의 평생학습 시대로의 돌입;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 필요 => 생애학습권 보장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개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지향
- \* 헌법에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 실행 현황  
=> 국가 교육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평생교육 예산 비중  
=> 광역 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기초 단체장(시장·군수)의 의지에 달린 지역평생교육  
=> 공공 정책 서비스로서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지역간 편차 확대  
=> 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일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 미비 및 운영의 한계 상황

##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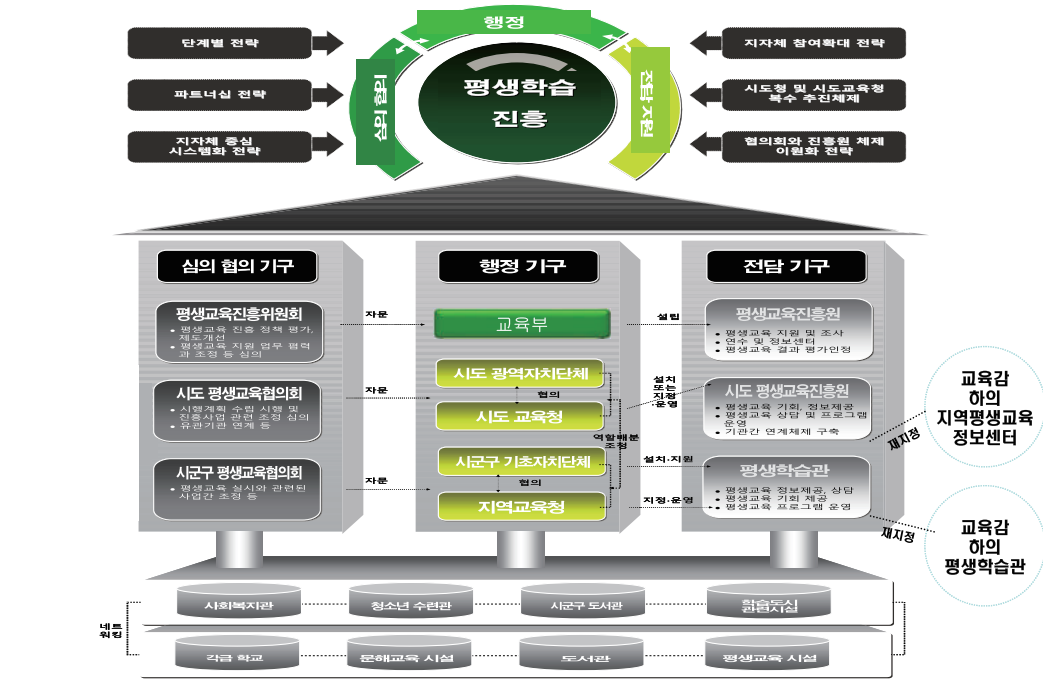
- 「평생교육법」 근거로 국가단위 평생교육 행정 기구 설치·운영
  - ⇒ 행정기구 : 교육부 평생지역교육국 산하 평생학습정책과 등 설치
  - ⇒ 심의의결기구: 평생교육진흥위원회
  - ⇒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 및 「조례」 근거로 지역단위 평생교육 행정 기구를 설치·운영
  - ⇒ 행정기구 : 시·도, 기초에 평생교육 전담 과 및 팀 설치, 시·도교육청에 평생교육 담당 배치 운영
    - ※ 법상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수립 및 진흥원 설치·운영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으나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 절차를 두어 책무에 대한 명시 불명확으로 혼선 발생 가능 여건임
  - ⇒ 심의의결기구: 평생교육협의회
  - ⇒ 전담기구: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일반 행정, 교육행정 간 분리로 인해 평생교육사무에 대한 연계성 확보 한계 해소노력 부재**

**행정:**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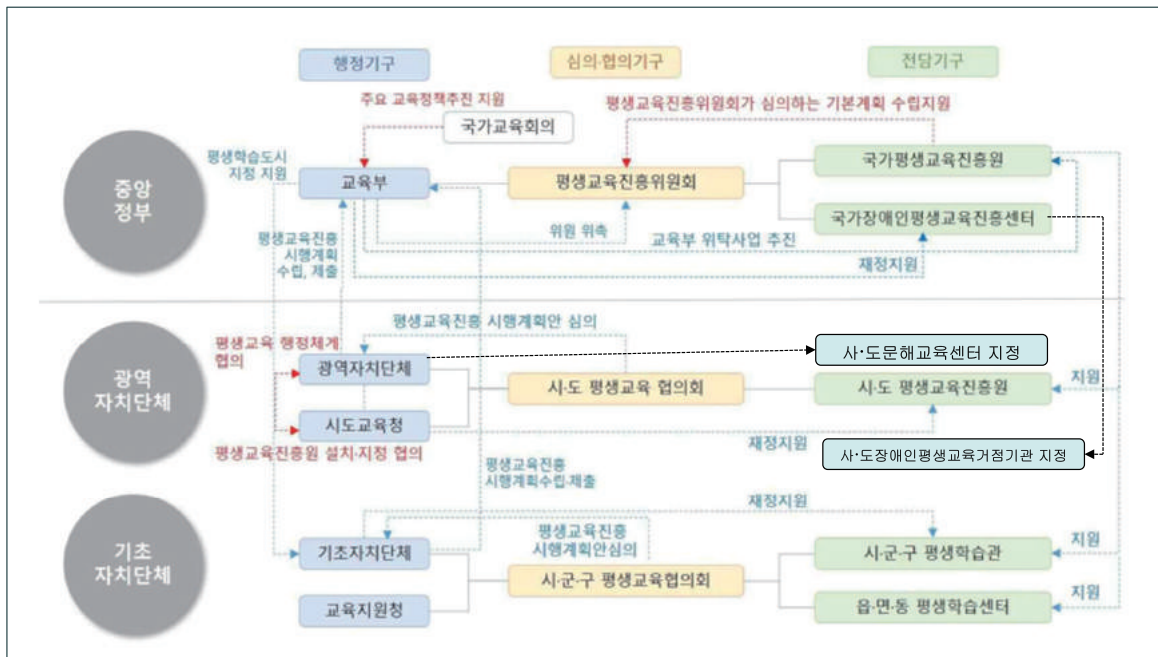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취급 사무에 따라 국가 행정 기관 또는 관치 행정 기관과 자치 행정 기관으로 분류되고,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 관청, 의결 기관 또는 자문 기관, 감사 기관, 집행 기관, 보조 기관 따위로 분류(네이버 국어사전)

### 2007~2016년 평생교육 추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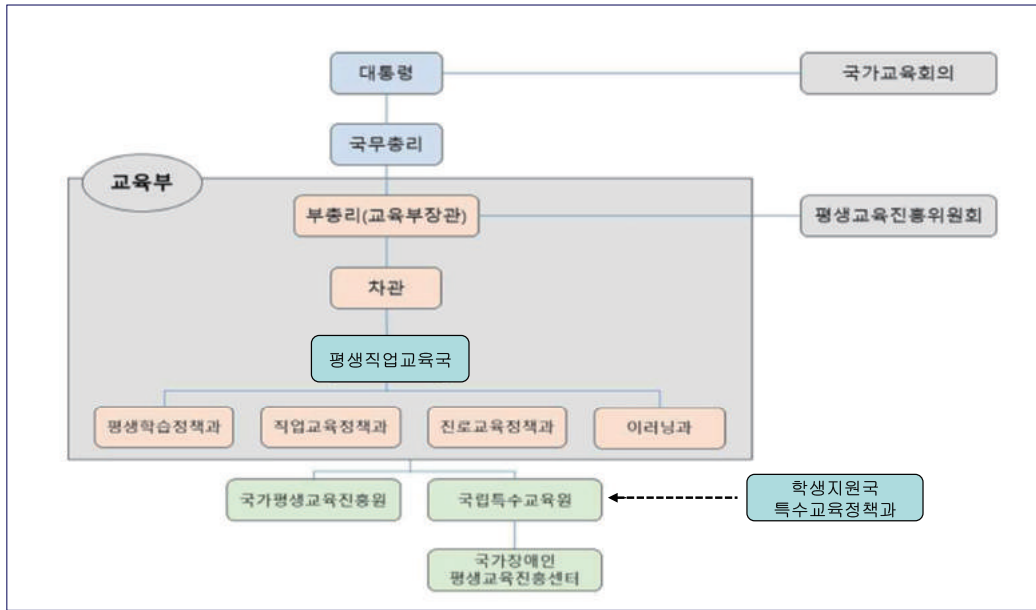
5

### 2015년 이후 현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재구성



※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 체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분절된 전달체제임  
출처: 조대연(2021), 제1차 대한민국 평생교육 대토론회, 한국평생교육학회, P. 41, 수정하여 사용

## 2021년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



※ 교육부 내에서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과 역할 확대를 위한 업무의 재구조화 필요

출처: 조대연(2021). 제1차 대한민국 평생교육 대토론회, 한국평생교육학회, P. 42. 수정하여 사용

## 국가 교육예산에서의 평생교육 예산 현황

### \* 국가 교육예산의 1%에 머무는 평생교육예산

- ⇒ 1% 예산, 2022년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예산 : 826 → 954억원(128억원 증대)
  - ※ 평생직업교육 구축 예산 대비 8.4%
  - (평생직업교육 구축예산 2021년 1조 830억원 → 1조 1,316억원(782억원 증대))
  - ※ 2022년 총 예산 대비 1.26%

- ⇒ 2022년 교육부 예산, 89조 6,251억원 (전년 대비 13조 1,606억원 증대)
- ⇒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조 595억원 (전년 대비 11조 8,295억원 증대)

### \* 현재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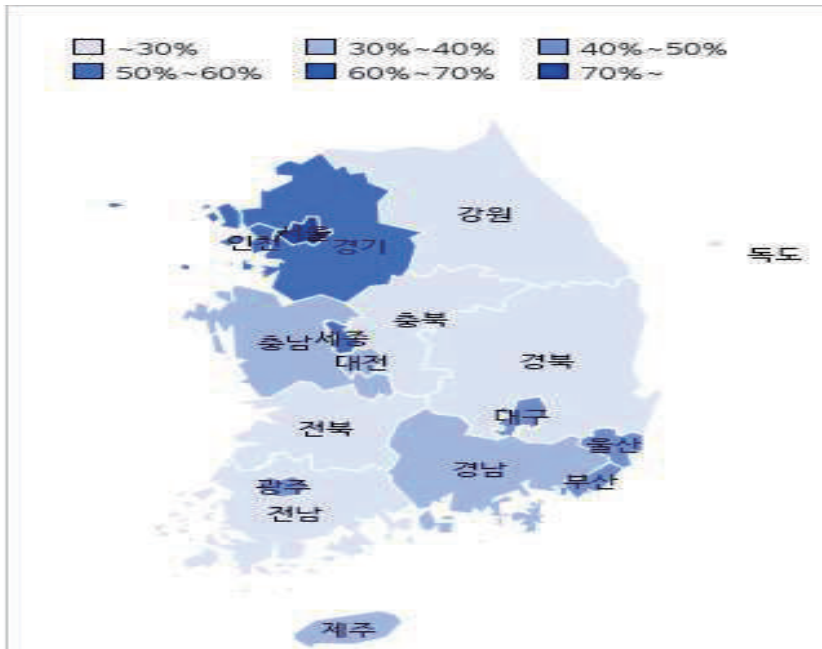
- ⇒ 2060년엔 5,400만원으로 5배 증가 전망
- ⇒ 지방교육재정 세입액, 2016년 66조 원, 2020년 82조원; 4년만에 24% 증가
- ⇒ 지방교육재정 세입액은 교육청 학령기 인구대상 교부금으로만 사용

### • 전 국민을 학령 인구로 반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적용 대상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 필요

- ⇒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교부금으로 재정 확보
- ⇒ 시·도지사 중심의 생애학습권 보장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 \* 광역, 기초 지자체 간 교육 투자 편차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 국가적 해소노력 부재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비교(2021년 기준)



- 광역, 기초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곧 평생교육 예산 투입의 차이 발생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평생교육 강화 필요

## 2. 평생교육정책 전개 과정과 현황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

- =>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의 전환
- =>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개시
- => 제1차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 지역 단위(교육감 산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개시

2001년 평생학습마을/도시조성사업 개시

- => 경기 광명시, 대전 유성구, 전북 진안군 시작
- => 현재 180개 평생학습도시 지정(2021년 7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2007년(2008년 시행)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 =>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 정비, 광역시·도지사에게 책임과 역할 부여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 시·군·구에 평생학습관 지정 설치·운영,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 => 시·도 및 시·군·구 중심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2016년(2017년 시행) 평생교육법 개정

- =>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및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특수교육정책과)
-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 의무화

**<2021년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

=> 개정 내용: 평생교육의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경비보조 및 지원과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을 반영)

=> 개정 이유

- 1)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 연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
- 3)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

=> 평생교육의 목적 명시: ‘국민의 권리보장’ 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

=> 법 시행의 의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이 될 것임

**전국 및 지역특성별 성인학습 참여율 비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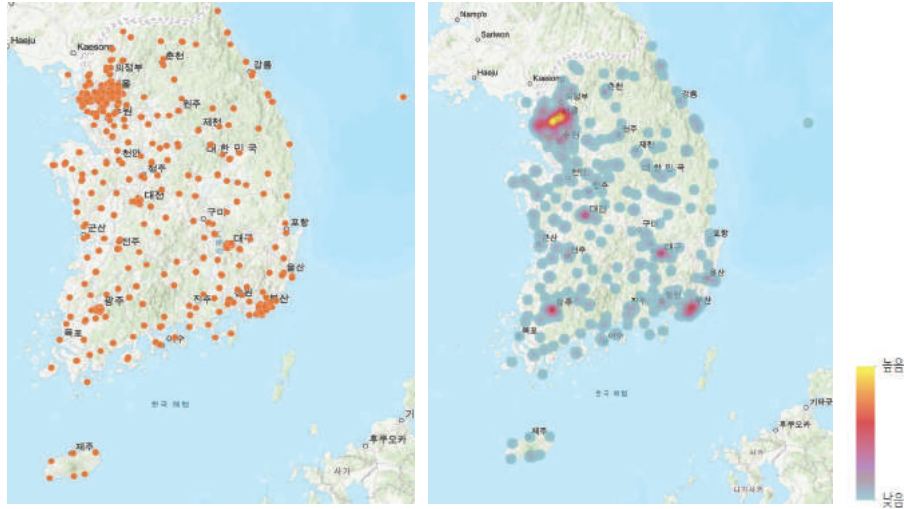
※ 2017년까지는 중소도시가 서울 및 광역시보다 참여율이 높았으나, 2018년 부터 역전되어 나타난 참여율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 이는 평생교육 참여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전국 및 지역특성별 성인평생학습 참여율					
구 분	전체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교 (서울 및 광역시 대비)
2016년	35.7	32.7	38.6	37.5	5.9
2017년	34.4	35.2	35.3	29.8	0.1
2018년	41.2	41.9	40.9	40	-1.0
2019년	41.7	42.7	41.9	37.9	-0.8
2020년	40.0	43.9	38.4	17.7	-5.5
2021년	30.7	수도권	비수도권		-2.3
		31.9	29.6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연계 추진 지역 조사

## 전국 평생학습관 분포도

전국 평생교육기관 분포(468개) 위치, 히트맵



※ 서울 및 광역시에 밀집된 분포도로 나타나는 평생교육기관 배치 현황임. 평생교육기관 분포의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과의 격차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기회의 차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3.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시작과 특성

#### •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시작

1. 1999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개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제1차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 시·도교육감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업무 개시
2. 2001년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전개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로 조례 제정 (최초, 2003년 부천시 평생학습조례) 및 담당부서 설치로 일반행정에서의 업무 개시
3.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이후, 광역시·도지사에게 책임과 역할 부여 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에 걸친 지역 평생교육 행정 체제를 구축(여전한 지역 간 격차 발생)

#### •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특성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협력의 한계  
=>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분절화
2.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근거한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 미비  
=> 국가의 모든 부처와 다양한 부문에 걸친 평생교육 영역을 포괄하지 못함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부, 환경부 등)
3. 평생교육법 상 시·도 및 시·군·구 중심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은 명시, 반면에 **실질적인 평생교육 행정에 대한 범위와 역할에 대한 지침과 업무 매뉴얼이 부재함**  
=> 중앙정부-광역-기초-마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연계성 확보 필요

## 4.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역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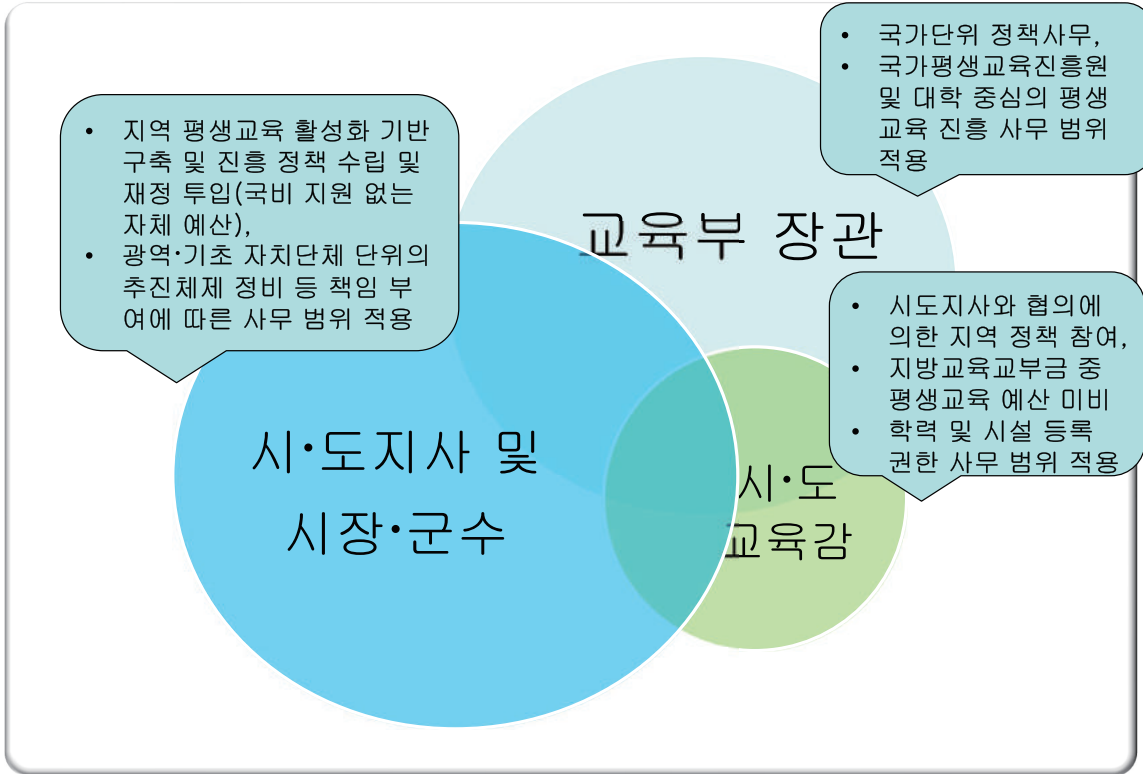
### •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역할(평생교육법상)

1.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와 동등한 임무 명시
  - ①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위한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 수립·추진
  - ②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부여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 ③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실시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④ 소관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의 실시 적극 권장
  - ⑤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 선택 및 참여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지원 활동
2.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함)
3.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4.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5조의 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5.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음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등 비용의 지원, 평생교육 참여 촉진 사업 등/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

## 4.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역할 2

6. 제17조(지도 및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도·지원, 평생교육 활동 종사자 의 능력향상 연수 실시
7.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통계 공개
8.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 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9.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시·도교육감의 평생학습관 설치, 지정·운영 해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0. 제21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센터 설치, 지정·운영 할 수 있음
11.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정보화와 관련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노력
12.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 경비 등 보조 할 수 있음
13. 제 35, 36, 37, 38, 38조의 2, 38조의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신고 및 통보
14. 제39조(평생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15. 제42조(행정처분), 제42의 2(지도·감독), 제42조(청문),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권한 명시

### 5. 국가와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범위 적용 현황



### 6. 국가-지역 평생교육 행정 체계의 현안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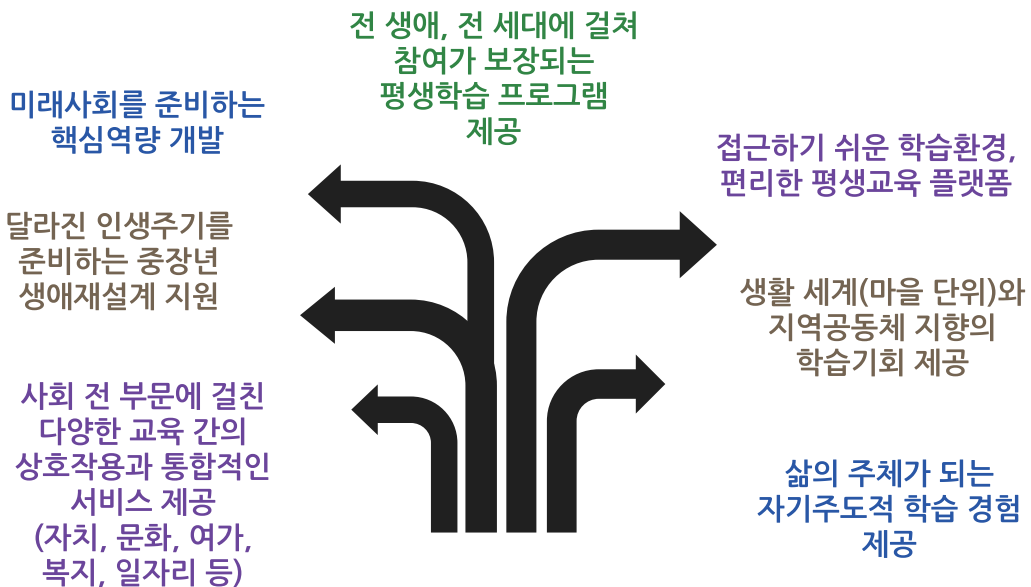
- \*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와 별개로 산재하는 각 부처별로 평생교육 추진·실행
  - => 국가의 모든 부처와 다양한 부문에 걸친 평생교육 영역을 포괄하지 못함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부, 환경부 등)
  - => 범 국가적이고 통합적인 평생교육 추진 체계의 구축 필요,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 => 교육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식 수준 제고 및 전 국민 대상 교육으로의 적용 범위 재정립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평생교육 정책 연계·협력의 한계
  - =>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분절화
  - =>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불명확,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책임성 명시 및 업무 분장 사무에 대한 구분, 기본 업무에 대한 매뉴얼 제공 통한 평생교육 행정의 제도화 필요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선언과 제도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할 지역 평생교육 행정 조직 및 인력, 재정 투입에 대한 제도적 접근 부재
  - => 2001년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전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에 의한 정책추진
  - => 국가 교육재정에서 여전히 1%에 그치는 평생교육 예산, 지방교육교부금에서 배제

## 7.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체계화 방안

1.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교육부)와 중앙부처 간 평생교육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 => 교육부 내 학교교육과 대별되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조직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 => 국가 부처간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다양한 부문에 걸친 평생교육 영역을 포괄·소통·조정
2.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임파워먼트 강화
  - =>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 체계 강화; 행정사무의 분장 및 책무·권한 강화
  - =>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무 포함(평생교육법과 불합치)
  - => 광역단위 전담기구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하는 법 개정 및 재정 지원
  - => 시·도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 된 사무 중 전 국민 대상의 통합 서비스 영역 업무인 경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관리 업무의 위임으로 지역 평생교육 행정의 효율적 운영 필요
  - \* 지역사회 전체를 단일구조로 하는 총체적이고 체제적인 접근이 필요
3. 국가 사무를 지역 사무로 위임·확대 운영시 담당 인력 및 재정에 대한 지원 우선 반영
  - =>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는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의 심화 원인
  - => 전 국민 대상의 공공정책으로서 자리매김과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체계화를 위한 필요조건

## 위기 사회의 대전환 모색, 평생교육의 대응방향

전 국민의 생애 전환을 책임지는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 실현





감사합니다.

제1회 평생교육 정책세미나(2022.04.08.)

## 지방소멸 대응과 읍면동 생활권 평생교육<sup>1)</sup>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1. 지역정책의 4대 근본과제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 1) 칸막이 속에서 전달되는 정책(사업) ==>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정비

- 정책의 협조체계 없이 ‘칸막이’ 속에서 전달 : 민간의 칸막이를 확대재생산
- 평생학습,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균형발전 등
- ☞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협조체계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 2)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정책 ==> ‘좋은 일자리’의 우선 제공

- 지자체 행정의 정책 수립 및 계획관리 역량 의문(순환보직제) : 정책 칸막이 강화
- 결국 외부 컨설팅 기관, 공기관, 전문가 등에 지나치게 의존 : 성과관리 주체 부재
- ☞ 대규모 국도비 사업에는 중간지원조직 의무 설치, 인건비 보장

#### 3) 시군구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 부족 ==> 민간 자치역량의 성장과정 지원

- 행정의 ‘수비범위’를 뛰어넘는 업무량 확대 : 단위 사업 확대, 보조사업 남발
- 민간은 권한 없이 ‘동원’되거나 자원봉사 요구 : 단발성 사업 집행에 집중
- ☞ 하향식의 제도적 정비(개선) 강화, 상향식의 정책결정 역량 강화

#### 4)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정책 협업 촉진

- 지역문제는 주민들도 충분히 숙지 : 사업지침 강요, 제도개선은 아주 더디게 진행
- 주민들의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조치 부족 :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
- ☞ 읍면동 자치계획, 행정통리 마을계획 등 주민주도성, 상향식 계획 확대

※ 결국 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필요 :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

1) 본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사회혁신 6회차 최종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은 하경환 단장(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구자인·하경환(2022.02.14.), “사회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정책과제 제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사회혁신 연속세미나 6회차 발표 자료

## 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료 1], [자료 2] 참고

### 1) 기본관점 : 정책과 주민 생활현장 사이의 괴리 극복

- 기초 지자체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설계된 한계 문제 : 1989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결과
- 읍면동은 정책의 최종 종착점이자 주민참여 시발점 : 특히 농촌 ‘면’ 단위
- 전국의 ‘좋은 사례’는 읍면동 단위에서 등장 : 행정리 단위는 지속성 문제 발생
  - \* **마을 단위(행정리, 권역) 우수사례** : 홍성군 흥동면 문당리,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 단양군 가곡면 한드미마을 / 남원시 인월면 달오름마을, 완주군 구이면 안덕마을, 진안군 동향면 능길마을 / 화천군 상서면 토고미마을 / 남해군 남면 다랭이마을, 사천시 사천읍 비봉내마을 / 이천시 율면 부래미마을, 양평군 청운면 외갓집체험마을, 양평군 단월면 수미마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마을 -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1,151개소)
  - \* **농촌 면 단위 우수사례** : 홍성군 흥동면·장곡면, 아산시 송악면 / 옥천군 안남면, 제천시 덕산면 / 영광군 묘량면, 곡성군 죽곡면 / 남원시 산내면, 완주군 고산면, 진안군 백운면 / 의성군 안계면, 상주시 모동면 등

☞ 균형발전의 거점공간으로서 읍면동 주민 생활권 단위에 대한 크게 주목

### 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혁신체계 구축 : 생활체감형 주민참여 촉진

- 주민참여 기반의 사회분야 정책 중요성 증대 : 복지·문화·환경·교육·공동체 등
- 정책의 주민 생활체감도 중요 : 생활현장 기반의 ‘정책서비스’ 전달 효과성 증대
- 읍면동 행정 기능 강화 동향 : 정책의 주민 체감도 향상, 수요맞춤형 서비스 공급 목적
  - \* '14년 복지허브화, '15년 책임읍면동,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 읍면동 혁신체계 구축으로 주민 주도 지역 발전의 핵심주체 형성과 지속성 확보

### 3) 시군구 단위의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제도화

- 기초 지자체 단위의 행정혁신이 정책 성과 좌우 : 완주군, 홍성군, 청양군 등
-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로의 정비가 핵심과제 : 중앙정부의 ‘정책적 유도’ 용이
- 충남도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2015년부터 지속적 추진
  - \* 행정지원체계 정비,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 시군구 정책혁신을 통해 읍면동 사회혁신의 지원체계 강화

## 3. [읍면동] 무엇이 급하고 우선해야 하는가?

### 1) (주민 주도 발전계획)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주민주도형 발전계획 수립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발전계획(단기, 중장기) 수립 : 행정복지센터 협력
  - \* 평생 학습(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등) 분야도 당연히 포함

- 발전계획에서 발굴한 지역의제를 각종 법정계획과 사업지침 등에 반영
  - \* 농촌 : 농업농촌발전계획(농발계획), 농촌공간 생활권계획(농촌협약), 삶의질 계획 등
- 주민 수요 맞춤형 국고·지자체보조금 교부·집행 체계적 근거 마련
  - \* 균특법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한 다부처·중장기 실행 자원 마련

**2) (행정조직 및 기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및 전환**

- 읍면동 생활권 발전계획을 지원하는 전담 팀 신설 : 평생학습 담당도 의무 지정
  - \* 전담팀 구성 :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상근) 외에 주민활동가 및 외부전문가 참여(비상근)
  - \* 전담팀 업무 : 주민자치,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읍면동소재지 개발 등 총괄조정
  - \* 평생학습 전담자 : 전북 진안군의 읍면 평생학습사 배치의 시행착오 경험을 적극 반영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및 개방형공모제 활성화, 권한 강화를 통해 전문성 강화

**3) (민관협치 제도)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공론장 확대**

-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시범도입과 단계적 확대 : 민간 책임성 및 주도성 강화
- 자치분권 3.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 : 2020.12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 [자료 1-3] 참고 : “읍면동 생활권 정책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본과제”
- 주민자치회와 평생학습의 강력한 결합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제 등
- 특정 의제의 공론화위원회를 읍면동으로 확대 적용 : 현재는 시군구 단위 설치
  - \* 공론화위원회 : 부지선정, 사업내용, 기존 이권과의 분쟁 등 갈등 관리의 숙의형 제도

**4) (시군구 정책 연계) 시군구 단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 시군구 단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읍면동 지원 기능 강화
- 통합 범위 혹은 연계협력 강화(핵심) :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평생학습, 마을교육공동체, 푸드플랜 등
- 평생학습의 읍면동 센터 설립 : 칸막이에서 별도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반성
  - \* 주민자치센터, 통합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과 통합형 설치

**5) (시범사업) 읍면동 사회혁신의 실험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혹은 제도**

- ①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농촌 마을공동체 기본예산제(활성화기금) 도입, ② 읍면동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③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농촌)재생 패키지 공모사업(면소재지 공공임대주택, 학교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적일자리 제공 등) 적용
- 특정 우선 의제\*에 대한 리빙랩 프로세스 적용과 실행
  - \* 노인 돌봄,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농업, 자전거 생활화, 학교살리기 등 주제 설정
- 기본재원 : 주민자치회 기본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일반농산어촌개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 \* 지방소멸대응기금([자료 3] 참고) - 기초지자체 최대한도 2022년 120억, 2023년 이후 160억원
  - \* 전남(16) :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4. 시군구 및 광역, 중앙 차원의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 1) (시군구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 통합형 정책위원회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 시군구 단위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민관협치의 정책위원회 설치
  - \* 지역정책의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가 필요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연계 검토
- 시군구 단위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균형발전지원센터(가칭) 설치
  - \* 평생 학습,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균형발전, 사회혁신,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부처 정책 융합형 중간지원조직
  - \* 통합의 영역과 형식(공간적, 물리적, 화학적), 명칭 등은 지자체 자율성 존중. 단, 상근자 인건비의 의무 편성과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비율 확대
  - \* 기본재원 : 기존 균형발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각 정책 영역 사업 등
- 중앙정부(균형위)의 '정책적 유도' 강화 : 행정 지원체계 강화 + 예산 인센티브
  - \* 각 중앙부처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의 가점 제공 요청 : 유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정책관리 전담 팀 설치),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전문직위군(群) 제도 도입 등

### 2) (중앙정부 정책수단) 지역발전투자협약 + 지역발전특구 + 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투자협약 : 상향식 계획 수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약 지원 방식 확대
  - \* 부처별 1개 정책 추진 : 예)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계획, 농식품부 농촌협약제도 등
  - \* 예산 시스템 정비, 지원방식 개선(다년도 포괄보조, 기금방식 등) 병행
- 지역특구제도 : 지역사회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강화, 완화)
  - \* 예) 농촌 '면' 단위의 학교 교육(의무근무기간 연장), 농촌교통(한정면허 특례), 농지관리(마을자치회 소유 인정), 농촌복지(보건복지의료 통합) 등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2004년 도입) 사회혁신 포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지역사회혁신 분야 도입
  - \* 균특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에 사회혁신 항목 포함(담당부처는 협의 결정)

### 3) (현장 전문인력 양성) 광역 단위 정책 연수원 설립과 운영 지원

- 심화연수 수요 확대 : 지자체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현장 활동가 등
  - \* 민간에서는 '역량 있는 사무국장급 활동가'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연수조직 부재
- 설치방식 : 숙박시설 기반의 전문연수원
  - \* 1안) 광역 단위로 지역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인재연수원 설치
  - 2안) 기존 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을 전면개편하여 민간 활동가 연수도 병행
  - 3안) 지역내 민간 전문조직에게 각종 프로그램 방식으로 위탁 운영(3~4년 연속, 포괄예산)
- 재원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시군 지자체 및 민간 공동출연

※ 읍면동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관-관, 민-민 '정책 칸막이'를 넘어 공동으로 대응

[자료 1] 시군-읍면-행정리 정책의 층위 구분과 대응과제

시군구-읍면동-행정통리 등 정책의 층위 구분과 대응과제

1. 정책의 층위 구분과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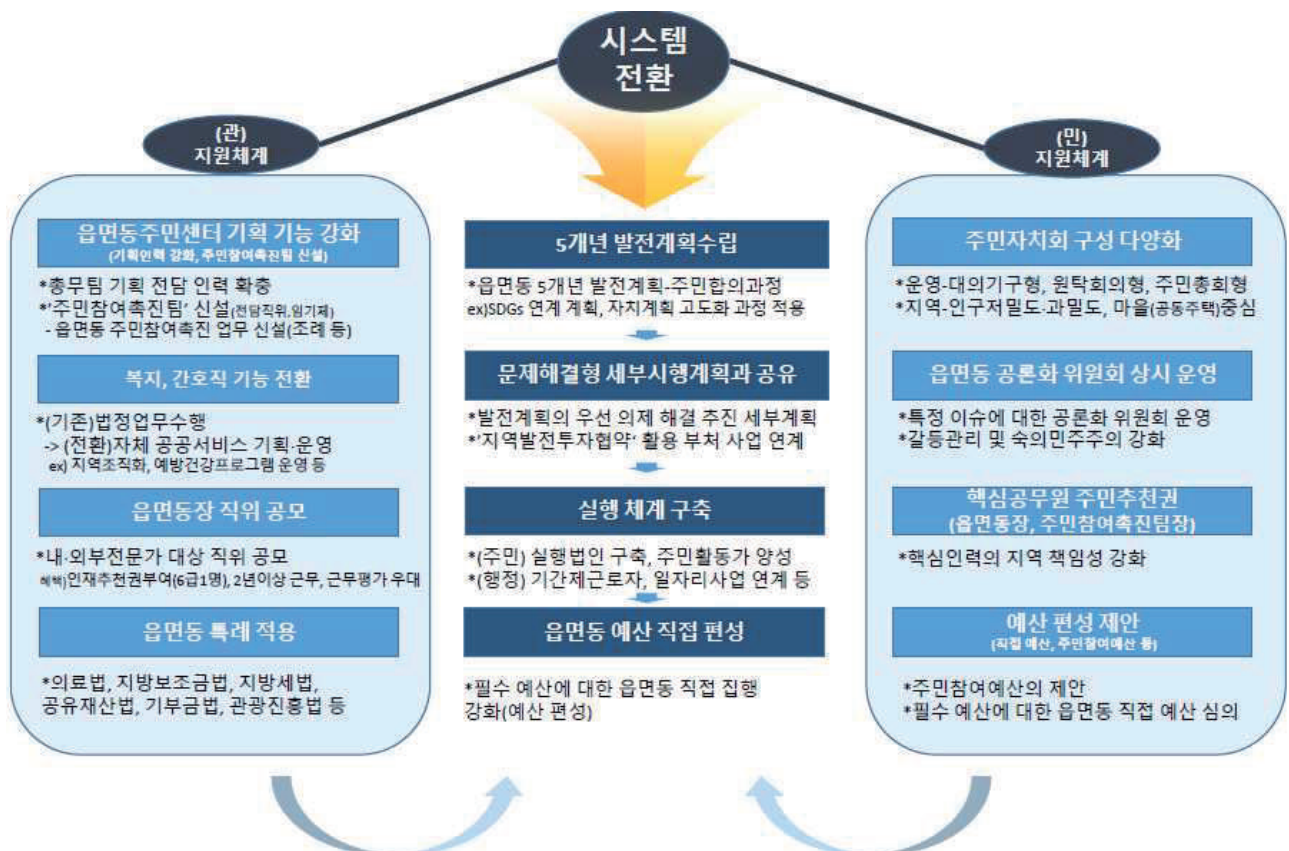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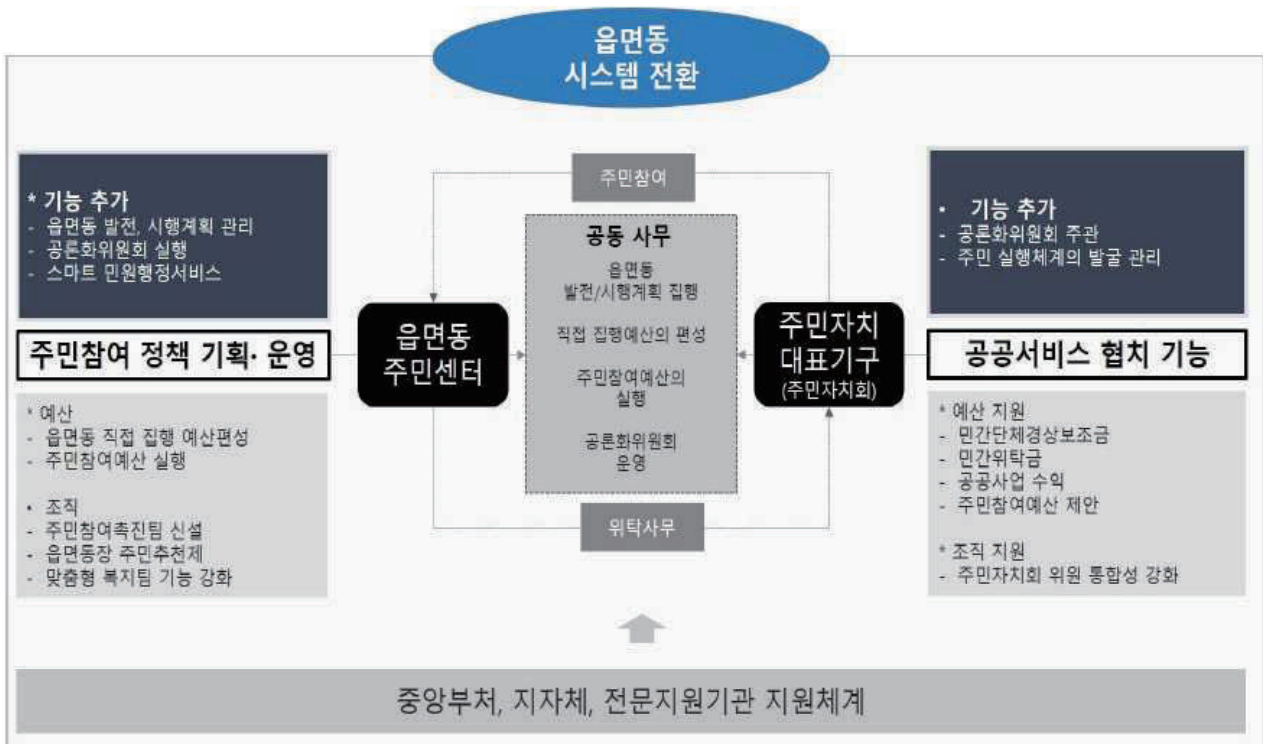
- 시군구 및 광역, 중앙정부 : 민관협치의 제도적 시스템 정비
- 읍면동 : 주민자치 강화와 민-관 협력모델 개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 행정복지센터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권한 이양과 공무원 인력 확대
  - \* 면장 주민추천제(공모직위제)와 공무원 전문직위제 확대 시행 : 면소재지 근무 유도 병행
  - \* 주민참여예산제 개혁을 통해 민-관 협력 강화 : 면 단위 기본예산제 도입
  - \* 현장밀착형,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사회적일자리 사업 도입
- 행정리 : 행정리 제도 개혁과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 지원

2. 읍면동 생활권 정책의 접근 방법

- 정책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와 행정통리 단위 마을자치의 역량 강화로 확장해야 함
  - \* 읍면동 단위의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이 '지치지 않고 반복되기 위한, 또 실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전제조건'에 해당하고, 또 이런 실험이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 환경'에 해당함
- 민간 영역에서는 읍면동 단위에 더욱 밀착하여 사회혁신 사례 창출에 우선 집중하되, 정책의 층위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평생학습의 마을만들기)
  - \* 읍면동은 정책 협업이 실질적으로 전개되면서 '평생학습의 마을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공간에 해당함.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정책 협업을 지속적으로 모색
- '하향식의 제도적 정비'와 '상향식의 정책 참여 촉진'이 선순환하면서 지역사회문제 해결도 단계적으로 가능함.
  - \* 출발지점-접근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읍면동 생활권 단위로 성과가 축적되어야 함



### 3. 읍면동 생활권 정책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본과제



자료 : 하경환(2022.01.24.), “생활현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동 사회혁신체계 구축 제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 사회혁신 연속세미나 5회차 발표 자료

[자료 2] 구자인, 충북평생교육 2021-여름호 <시선>, 투고 원고

## 평생학습의 마을만들기, 칸막이를 극복하고 읍면에서 만나야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주민이 등장하고, 지방의원을 스스로의 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흘렀다. 거슬러 올라가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것으로 보자면 60년이 흘렀다. 이제는 주민 손으로 읍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기억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선거 부작용을 지적하며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소리도 있고, 한쪽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2021.5.31, 대전)를 발족시켜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한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 올라가보시라. 읍면장 사진들이 영정처럼 액자로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은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다. 1956년과 1960년에 선출된 읍면장이 그러하다. 그리고는 1961년 군사쿠데타로 30년간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선 단체장이 시군 단위로 배치되었다. 하지만 1987년의 민주화운동 성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될 때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부활되었다. 지방의원은 1991년에 단체장은 1995년에 이루어졌다. 그 때 이후로 우리는 서구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넓고 큰 자치단체 속에 살게 된 셈이다.

이 점이 평생학습이나 마을만들기 측면에서 왜 중요할까? 몇 가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주민자치운동 30년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볼 때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우리들의 실천 노력이 결코 작지 않았음에도 정책 칸막이는 극복하지 못하고, 민간단체 사이의 분열은 더 심해지고 있다. 정부 예산이 적게 투자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적게 느껴진



평생학습의 마을만들기, 과연 프로그램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을 주민 스스로 평생학습운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 무엇보다 농촌 공동체의 붕괴 속도는 너무 빠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어디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마을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세계다. 국가와 시장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될 자치 공간이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더불어 다시 주목하게 된 발견이다. 그런데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꿈을 꾸고 더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한다. 이러한 꿈과 희망이 국가 정책이나 제도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시키는 반대로만 하면 된다’, ‘뭉치면 망한다’, ‘풍년 드니 더 걱정이다’, ‘행정 사업 때문에 마을 갈등만 심해졌다’, 이런 소리가 왜 계속 나오는 걸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 자체를 꺼려하는 주민들도 많다.

국민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의 시혜적 정책도 계속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바우처 등 새로운 제도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 현장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큰 간극이 존재함을 느낀다. 정책의 빈 영역이 항상 드러나고 세련되지 못함에 불만이 커진다. 유권자 주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 준비는 너무 느리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설계에서 읍면이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는 결함이 크게 느껴진다. 선거 때만 작동하는 투표민주주의에 그치고,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이 실현되기에는 시군구 행정은 너무 멀리 있다. 이 점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싶은 근본 과제에 해당한다.

우리가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로 자치권한이 이관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의 대표기구로 법적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 다양한 정책들이 읍면 단위에서 서로 결합하고, 중간지원조직들도 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 협력해야 한다. 평생학습도 자원봉사도 지역복지도 칸막이를 극복하고 마을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 사무실을 지키는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스스로의 존립 목적도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일하는 보람도 쉽게 찾기 어렵다.

우리는 마을 발전의 출발점이 평생학습에 있다고 자주 주장해왔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하고, ‘공부하는 마을’, ‘책 읽는 마을’이 되어야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고 스스로 문제 해결의 힘을 키우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질문을 던진다. 그럼에도 ‘공짜’ 강좌나 선진지 견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한 하면 도깨비가 된다’.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합의하는 문화적 전통이 필요하다.

(위 사진은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이 지원하여 2019년 12월에 진행된 ‘장곡면 2030’ 교육문화분과 토론회 장면)

학, 행정 보조사업에 익숙한 현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정치의 후진성과 맞물려 ‘줄서기’가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공공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존중받는 풍토가 아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떤 계기를 활용해야 악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학습(學習)이란 한자 그대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고 항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마을로 나와 보면 모두가 선생님이고 지역 전체가 학교다. 학습이란 활동은 학교나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학습은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운다. 하지만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수정되고 견제되며 균형을 유지한다. 지역사회가 공동체로 작동될 때에는 그렇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떠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라면 평생학습은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되돌아보자. 마을공동체,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지속가능발전 등은 1990년대 이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고, 정부 정책으로 수렴되면서 ‘정책 칸막이’에 갇혀 상호협력하는 관계들이 단절되어 왔다. 시설에 갇히고 프로그램을 남발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라본다. 행정 사업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민보다 행정 눈치를 더 많이 본다. 모두가 크게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지역마다 강력한 학습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학습조직을 만들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실용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끔 끈질기게 밀착하여 움직여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현장 가까이에서 먼저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작은 학습조직도 많아야 하고,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학습과 토론의 공론장도 일상적으로 열려야 한다. 정책 영역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도 민간도 읍면에서 만나야 한다. 그래야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강력한 학습운동이 필요하고, 정책은 현장에서 수립되어야 실효성이 높다. 행정과 전문가가 주도하면 주민은 대상이 되고 만다.

(위 사진은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매년 2회, 1박2일로 진행되는 강학회 일환으로 2018년 7월에 진행한 ‘우리 손으로 만드는 농촌마을정책’ 워크숍 장면)

[자료 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개요2)

1. 기금 개요

-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기금 목적)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
- (기금 성격)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
-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 ※ 다만,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
- (운용 주체)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영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
  - \* 조합 사무국을 신설하여 지자체 파견,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등으로 운영 예정
  -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2. 기금 배분계획

- (배분규모) 기초지원계정 7,500억 / 광역지원계정 2,500억
  - ※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지원계정 5,625억원, 광역지원계정 1,875억원)으로 운영
- (배분원칙) 기초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배분(차등)
  -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정액)
    -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 (기초지원계정) ①인구감소지역(89개)은 최대 160억('23년), ②관심지역은 최대 40억('23년) 범위에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금액 차등 지원

구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21.10.19)한 지역(89개)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인구감소지역 수의 20%, 18개 내외)	
배분규모	95%		5%	
	('22년) 5,343.75억	('23년) 7,125억	('22년) 281.25억	('23년) 375억
최대한도	('22년) 120억	('23년) 160억	('22년) 30억	('23년) 40억
	※ 평균 60.0억	※ 평균 80.1억	※ 평균 15.6억	※ 평균 20.8억

- (광역지원계정) '23년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의 경우 505억(전남)~5억(경기), 그 외 광역은 18.75억(광주, 제주)~12.5억(대전, 울산) 배분

(단위: 억원)

시·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서울
배분금액('22년)	378	363	258	240	223	180	119	25	23	14	14	12	9	9	4	0	0
배분금액('23년)	505	485	345	320	297	240	159	35	32	19	19	16	13	13	5	0	0

3. 2022년 기금 투자계획 제출 기한 : ~22.5월

2)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 2022.2.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에서 일부 요약

#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교육 : 관계와 과제

- 의성미래교육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04. 08.

유정규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장)



## - 목 차 -

1. 문제의식 : 접근시각

2.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노력

5.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향후 과제



# 문제의식 : 접근시각

## 1. 문제의식 : 접근시각 4

- ❖ 마을교육공동체
    - 개념, 논리 ↔ 현실
  - ❖ 마을학습공동체
    - 개념, 논리 ↔ 현실
  - ❖ 평생학습
    - 개념, 논리 ↔ 현실
- ➔ **관계 파악** → **공통의 목표 설정**
- ❖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목표 : 삶의 질 개선 →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 과제 : 교육·학습(문제)에 관한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 유도, 학교혁신, 마을학습
      - 교육공동체와 학습공동체·평생학습의 결합과 통합적 접근 필요
  - ❖ **의성의 사례가 갖는 의미는 ?**
    - 목표를 향한 노력의 과정 → 모범사례 ?? 성공 ??? → 향후의 과제 ?



##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 <참고자료>

- 김미향(2020),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탐색, 「평생학습사회」 제6권 제1호
- 김은경(2019), 마을교육공동체의 협업 체계 구축 방식에 대한 인식 분석, 「성인계속교육연구」 제8권 제3호
- 신기왕(2021), 마을학습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平生教育學研究」 Vol 27. No4.
- 양병찬(2014),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서울시공동체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 제2권 제1호

## 2.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6

### 1)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1)

#### ❖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지역의 교육주체들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교육공동체(신기왕, 2021)
-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주민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교육공동체(서울시, 경기도교육청)
-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공동체(부산시)
-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 현장을 교실 밖으로 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박효성, 2017)

#### ❖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등장배경

- 학교 교사의 자발적인 교육혁신(학교교육의 한계 극복) 노력으로부터 출발 →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 학교교육의 한계 = 교육혁신의 내용
  - 학교운영 측면: 교육주체의 자율성 부족 → 교육주체의 자율성 회복
  - 교육과정 측면: 교수자 중심 학습 → 수요자(=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
  - 교육내용 측면: 입시위주 교육 → 전인교육 지향
  - 사회적 측면: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력 미흡 → 사회적 불평등의 이해와 해소 노력
- 혁신교육지구: 아이들의 성장과 삶을 함께 책임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운영, 마을과 학교의 연계활동 지원,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 강화
  -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 → 참여, 실습, 체험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량 함양
  - 마을에 관한 교육: 학생을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것
  - 마을을 위한 교육: 학생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 2.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7

### 1)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2)

#### ❖ 마을교육공동체의 관점

- **학교교육 보완적 관점** : 학교교육의 한계를 마을과 지역이 보완 → 학교를 위해 마을의 자원을 활용
  -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공동체(서용선 외, 2016)
  -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그 주인이 되도록 키우는 것(김용현, 2015)
  -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사와 마을이 함께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공교육의 경계를 확장해 가는 교육공동체 → 학생을 중심으로 한 마을과 학교의 연계·협력 강조(정윤아, 2019)
- **평생학습사회 지향적 관점** : 학교교육의 혁신을 넘어 지역주민의 집단지성화 및 주체화 추구
  - 학교교육의 개혁만을 위한 수단적 기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혁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심성보 외, 2019)
  - 학교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운동과 지역사회 재생운동을 포괄
  - 학교혁신을 넘어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며, 학교교육의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사회발전도 고려(김미향, 2020)
- **사회유기체적 관점** : 학교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사회적 기능 주목 → 지역사회 전반의 성장 지향
  -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주민자치, 지역재생, 공교육 안과 밖의 협력을 통한 자립적 마을만들기에 복무하는 교육운동(이병근, 2018)
  - 학교교육 보완적 관점과 평생학습사회 지향적 관점의 통합 버전 →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지향적 발전 지향

#### ❖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흐름 : 유기체적 관점 중시

- 학교 주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주체의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
-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의 지원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한 후에 학교교육에 대한 한계와 문제에 대한 지역의 배려와 지원이 나타나고 있음
- 교육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 교육은 삶 속에 존재한다

## 2.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8

### 2) 마을학습공동체의 이해

#### ❖ 마을학습공동체의 개념

-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을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마주하는 주민의 학습과 소통의 공동체(신기왕, 2021)
- 공동체와 학습이 융합된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인 학습모임의 확대된 의미로 지역 전체를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이해
- 교육을 평생의 과정으로 확대시키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의 이념에 기반함
- 마을학습공동체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확산됨

#### ❖ 마을학습도시조성

-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학습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자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한국교육개발원, 2005)
-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역주민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학습공동체를 추구하는 사업
  - 민주화 이후 주민교육공동체운동에 의해 촉발됨

#### ❖ 평생교육과 학습공동체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2.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 3)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학습공동체, 평생학습의 관계

-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습공동체
목적	아동(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 충족
기원	교사의 교육개혁운동	민간의 지역사회교육운동
정책 출발	혁신학교 지정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정책 변화	혁신학교 → 혁신교육지구사업 →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 사업 → 행복학습센터 →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
추진 주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철학	진보주의 교육 : 교육과 민주주의	인본주의 교육 : 교육의 민주적 권리, 교육 의 개방성
개념	페다고지/아동학습/계획적이고 조직적 인 활동	안드라고지/성인학습/교육의 비형식·무 형식성
공동체	학교공동체가 지역전체로 확대	학습공동체가 지역전체로 확대
마을과 학교의 협력	학교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마을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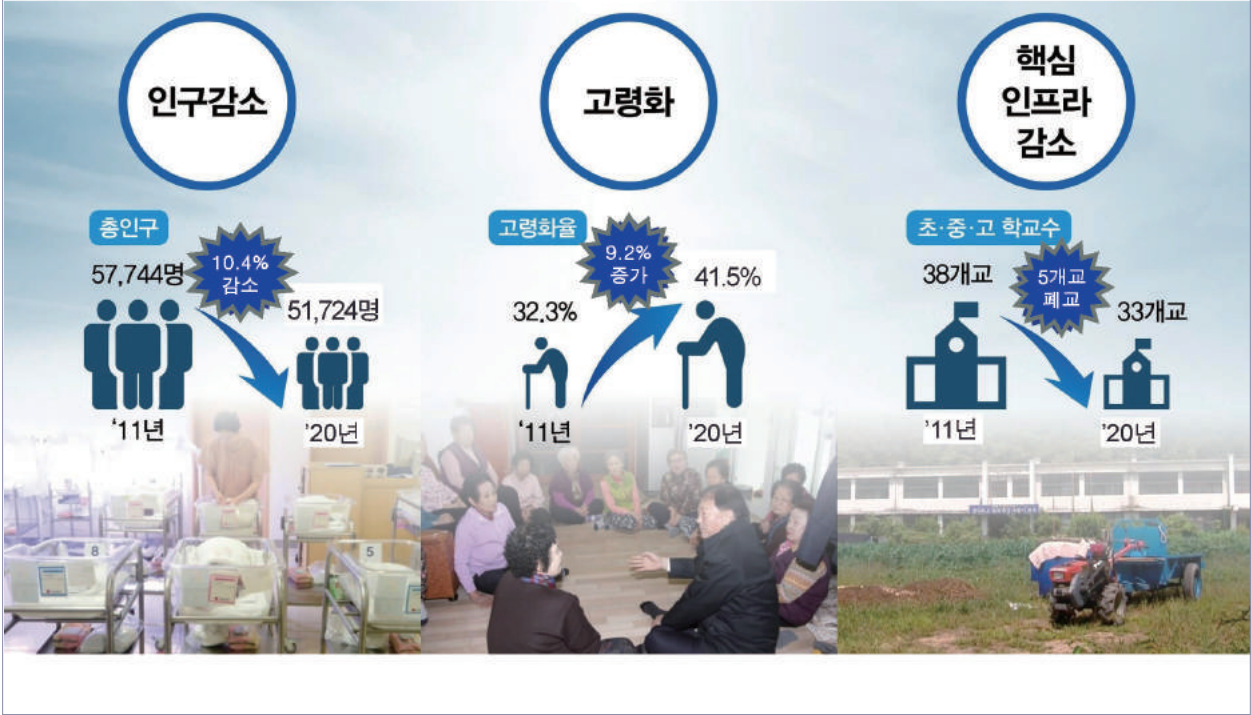
※ 자료 : 신기왕(2021), p.148.



##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1

#### 1) 의성군의 현실(1)



###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2

#### 1) 의성군의 현실(2)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b>총인구</b>	<b>76,327</b>	<b>64,457</b>	<b>58,832</b>	<b>54,477</b>	<b>51,724</b>
유소년인구수(명) (15세 미만)	9,358 (12.3%)	6,284 (9.7%)	4,533 (7.7%)	3,467 (6.4%)	2,959 (5.7%)
생산가능인구수(명) (15~64세)	51,952 (68.1%)	41,177 (63.9%)	35,644 (60.6%)	31,357 (57.6%)	27,287 (52.8%)
고령인구수(명) (65세 이상)	15,017 (19.7%)	16,996 (26.4%)	18,655 (31.7%)	19,653 (36.1%)	21,478 (41.5%)
청년인구수(명) (20~30대)	18,662 (24.5%)	13,665 (21.2%)	10,666 (18.1%)	7,964 (14.6%)	6,921 (13.4%)
출생자수(명)A	506	330	315	249	227
사망자수(명)B	1,025	870	773	860	924
B/A(명)	2.03	2.64	2.45	3.45	4.07
합계출산율(%)	1.34	1.20	1.45	1.51	1.76

###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3

#### 2) 교육부문의 문제와 대안 모색



###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4

#### 3) 경북 미래교육지구사업 개시

➤ 2020. 2. 13. 경북교육청 · 의성군, 미래교육지구 MOU체결



2020. 4. 16.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개소

###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5

#### 4)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비전과 목표



###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6

#### 5)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추진체계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7

**6)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주요내용(1) : 지역교육생태계조성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b>1-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b> 1) 의성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운영(교육지원청) 2) 의성미래교육지구 실무추진단 운영 3) 마을교육공동체 분과 운영(학생, 교사) 4) 마을교육협의회 운영 5) 홍보 및 아카이브 - 홈페이지 관리, 홍보 등 6) 지역 기관, 시설과 MOU체결	
	<b>1-2. 마을교육공동체 인적자원 역량강화</b> 1) 마을학교 플래너, 마을교사 양성	
2. 교육자원발굴 지원	<b>2-1. 지역교육자원 개발</b> 1) '의성지역학'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지원 2) 마을교과서 개발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8

**6)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주요내용(2) : 마을교육공동체구축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3.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b>3-1. 마을학교 운영</b> 1) 마을학교 운영 지원 2) 학부모 공동체 지원 3) 마을학교 관계자 워크숍	
	<b>3-2. 학교-마을 결합교육 지원</b> 1) 마을-학교 축제지원	
4. 세대공감 공동체지원	<b>4-1.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공동체 지원</b> 1) 문화예술공동체 운영지원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19

6)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주요내용(3) : 지역특화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5. 학교 밖 성장활동 지원	<b>5-1. 미래를 위한 성장활동 지원</b> 1) 진로탐색체험학교 지원 2) '꿈성장학교' 지원	교육부 공모 사업
	5-2. 청소년 영어스포츠 지원	
	5-3. 의성 ON토론	
	5-4. 성장지원단 컨설팅	
6. 미래교육지구 경험 페스티벌	<b>6-1. 더 나은 의성미래교육</b> 1) 의성미래교육 민-관-학 원탁토론회 2) 의성미래교육 경험 박람회	

3.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개요 20

7) 의성군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연차별 추진단계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1) : 마을교육공동체 분과운영

- 분기별로 운영하여 각 분과별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공동체의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함

학생분과



마을분과



교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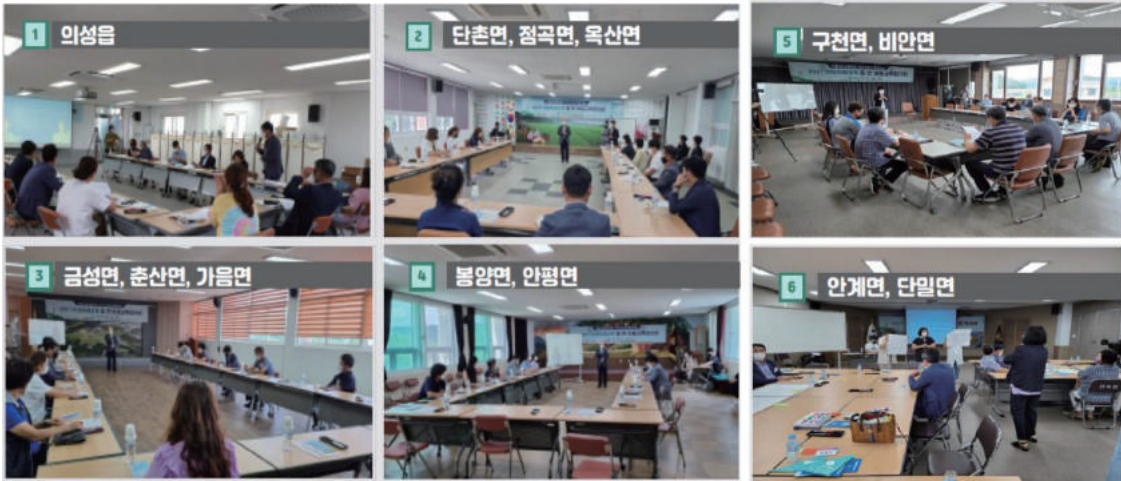
학부모분과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23

### 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2) : 마을교육협의회 운영

➢ 마을의 교육주체들이 마을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여 마을교육자치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꾀하고자 함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24

### 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3) : 지역 기관·단체와의 MOU 체결

순서	기관단체명
1	의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
2	의성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3	의성군립도서관
4	(주)들길
5	비출담다
6	산수유권역영농조합법인
7	숲속 체험마을협동조합
8	안계승마체험장
9	에그랑
10	(주)의성국웨이영농회사업법인
11	(주)제월아트체형센터
12	태양마을영농조합법인
13	팜캠프잇다
14	향기마을영농회사업법인(주)
15	빅토리팜
16	단산문화센터
17	의성문화원
18	단북 사회보장협의체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2) 마을교육공동체 인적자원 역량강화 : 마을학교 플래너·마을교사 양성교육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역량 강화
- 교육자치의 주체인 인적 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토대 구축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3)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1) : 의성 교육자원지도 제작

기간	2020년 9월~ 12월
대상	의성군 관내 유물,유적,문화자원, 체험기관
조사자	플래너 중심의 연구회
검수회	12월 9일 14:00, 검수위원 구성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27

3)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2) : **교육과정 재구성**

- 기간 : 2021년 9월 ~11월
- 참여학교 : 금성초, 안계초, 삼성중, 금성고(총4개교)
- 학교 교사 중심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연구계획을 수립 하고 실행함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계획 수립  
(4)학년 지역연계 특색교육과정 운영 계획

순	활동 주제	실현 목표	내용	활동내용(교과명, 교사)
1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 계획 (10월12일)
2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3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4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5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6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7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8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9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10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11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12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13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14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15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지역 고, 우리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월12일)

합계 : 15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28

3)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3) : **마을교과서 개발**

- 기간 : 2021년 5월 ~11월
- 참여마을학교 : 안계마을학교
- 교사-학생-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의 선순환 효과 증대를 꾀함



제목 | 마을학교 연계 프로젝트 수업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체험수업, 함께 배워요**

의성 안계초, 연계 프로젝트

안계초등학교는 지난달 8월, 17일, 30일, 3일간 3,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학교와 연계한 '마을에서 함께 배우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학교와 마을연계 교육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고,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모델 실천을 통해 배움과 삶이 있는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계된 지역의 공공기관, 주요 장소 등을 직접 탐방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말 다하고 살아가는 구체적 현실 공간인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본○○ 마을교사는 "마을에서 함께 배우요" 수업은 학생들의 내 고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에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스스로 찾고, 살펴본 마을지도를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주제적 이고 창의적인 학습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신 학교와 선생님, 여러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운영 소감을 밝혔다.

김종도 교장은 "마을에서 함께 배우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삶과 배움의 공간 인체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의 예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을과 함께하는 체험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박초영기자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4) 마을학교 운영(11개소) : 다함성 마을학교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5) 학부모 공동체 운영 : 학부모 학습동아리 · 봉사동아리

-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동아리, 교육동동체 활동
-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공동체
- 마을학교 운영 지원
- 의성군 평생교육계와 협업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함(2021)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6)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공동체 지원(1) : 마을예술단

-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함께 배우는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으로 따뜻한 이웃되기를 목적으로 함
- 주민, 학생 등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동체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6)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공동체 지원(2) : 내 인생의 악기연주

대 상	마을단위에서 학생과 성인이 함께 배우기, 학교 단위
운영기간	9월 ~ 12월
지원현황	마을 - 단밀 생송리, 안계면, 옥산면, 철파리, 학교 - 금성고, 삼성중, 의성고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기 학교 밖 성장활동 지원(1) : 진로탐색체험학교

신청학급	금성고, 의성공고, 의성여중 등 7개 학교 17개 학급
운영기간	10월 ~ 11월
수업내용	미래모습찾기, 반전동화 스토리텔링 창작로드맵, 미래인재상, 진로토크콘서트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기 학교 밖 성장활동 지원(2) : 꿈 성장학교

- 청소년 4~5명이 스스로 배움을 계획하고 실천프로그램에 지원
- 의성서당 작은도서관, 비출담다, 애니콩, 뮤즈앙상블, 삼성중학교, 안계승마체험장, 안계마을학교 등 총 21개 꿈성장프로그램 지원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8) 더 나은 의성미래교육 지향 : 민·관·학 원탁토론회

- ▶ 장소 : 의성청소년센터 대강당
- ▶ 대상 : 군청, 교육청, 학교(교사), 학생, 학부모, 마을 대표 원탁토론 참여자



# 4. 의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노력

## 9)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소통 : 마을교육공동체 분과운영





##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향후 과제

### 5.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향후 과제 38

#### 1)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의 특징

- ❖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 : 지자체 주도형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일반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은 교육청 주도로 추진됨 → 경북내 5개 미래교육지구 중 4개 지구
  - 의성의 경우, 행정[지자체]에서 직접적·주도적 역할 담당 → 교육지원청은 형식적 역할, 학교 행정과 관련된 역할만 담당
  -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2020.4.16~2023.12.) 민간 위탁
    - ※ 경북 미래교육지구사업 5개 시군 중 의성에서만 중간지원기관 설치 운영 중
    - 나머지 4개 지구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추진 중
- ❖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
  - 미래교육지구사업(경북교육청+의성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미래교육지구사업(국토부)과 내용상 유사성이 큰 ‘함께 책임지는 교육’ 과 ‘교육부 공모사업(지자체)’ 통합추진 : 미래교육지원센터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시스템 작동 : 지자체(평생교육계)에서 실시하는 사업 혹은 지자체 교육 관련 기관(의성군 인재양성원)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통합적 추진
  - 중간지원기관의 자율성 보장 : 유사사업의 통합적 수주 →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가능 → 미래교육지구사업(4억)은 동부지역, 도시재생사업(2억)은 서부지역, 교육부사업의 지역특화사업에 투입 가능

5.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향후 과제 39

2)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의 성과와 한계

❖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추진성과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인식 향상 : 행정과 교육청의 협업
- 학교의 미래교육지구 담당교사 지정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학교의 인식변화
- 마을교육협의회가 15개 읍·면별로 구성 교육적 관심 제고 : 주민자치회와 연계
- 학교 밖 성장활동지원(진로탐색체험, 꿈 성장학교)으로 참여학생의 증가 및 인식개선
- 11개 마을학교 활동이 활성화 : 지역 내 주체의 형성
- 인적역량강화 : 마을교육공동체 플래너 및 마을교사 양성

❖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한계

- 마을학습공동체 조직의 미약 혹은 부재 → 지역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학습공동체를 미약
- 기존 학습공동체(=각종 주민동아리) 한계 : 지역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민감 → 지역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 주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지역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의 지역활성화와 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 미흡
- 마을교육 공간 부족으로 마을학교 활성화에 장애 초래 : 학교 내 유휴공간의 개방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중앙정부(교육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농촌의 특성상 이동거리와 교통편 한계로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 제약 :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 마을교육협의회가 구성은 되었으나 실질적인 활동 미흡 : 지역인구의 고령화·과소화 → 지역 교육문제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와의 연관성에 인식 미약, 지역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함

5.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향후 과제 40

3)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과제

❖ 학습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 학습공동체와 교육공동체의 융합

-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착과 발전은 마을학습공동체의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 : 평생교육사업과의 연계 필요
-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 내실화 :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학습 촉구

❖ 교육주체간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 마을과 학교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내 교육주체간의 인식 공유가 필요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유기적 결합 필요 : 일반행정(지자체)와 교육행정(교육청)의 협력체계 실질화가 필요

❖ 학교의 혁신과 마을의 학습 유도

- 학교의 참여와 협력, 혁신 없이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불가능 :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필요
- 학교 내 혁신 주체 발굴과 지원 : 지역과의 연계 강화 + 학교공간의 개방
- 마을의 학습 유도를 위한 정책 마련 : 학습마을사업의 내실화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지역개발사업, 주민자치의 연계 강화

- 마을교육공동체 = 공동체에 기초한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 → 지역개발사업과 동일
- 지역사회 유기체적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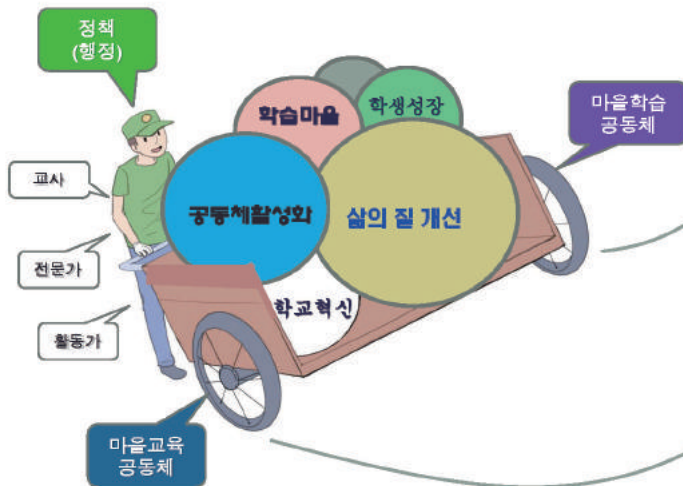
❖ 이론과 현실의 괴리 완화·해소 필요

- 현실과 유리된 현학적 이론과 정책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현실/현장 특이 농촌현장에서는 공허한 마을교육공동체, 학습공동체 이론이나 주장을 어떻게 현실적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
- 이론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

### 5.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향후 과제

#### <마을교육공동체 :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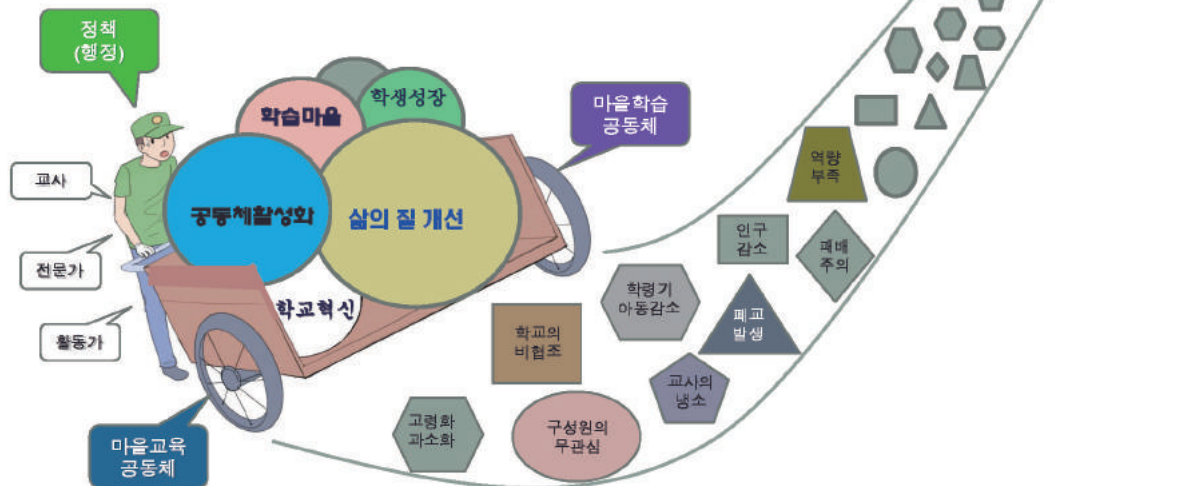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5. 의성 마을교육공동체, 향후 과제

#### <마을교육공동체 :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2)>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감사합니다

유정규 : [yu0367@hanmail.net](mailto:yu0367@hanmail.net)  
010-6399-0367

# 토론문

지방소멸시대의 평생학습정책에 대한 토론문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행정 토론문  
:보편적평생교육실현운동에 대한 몇 가지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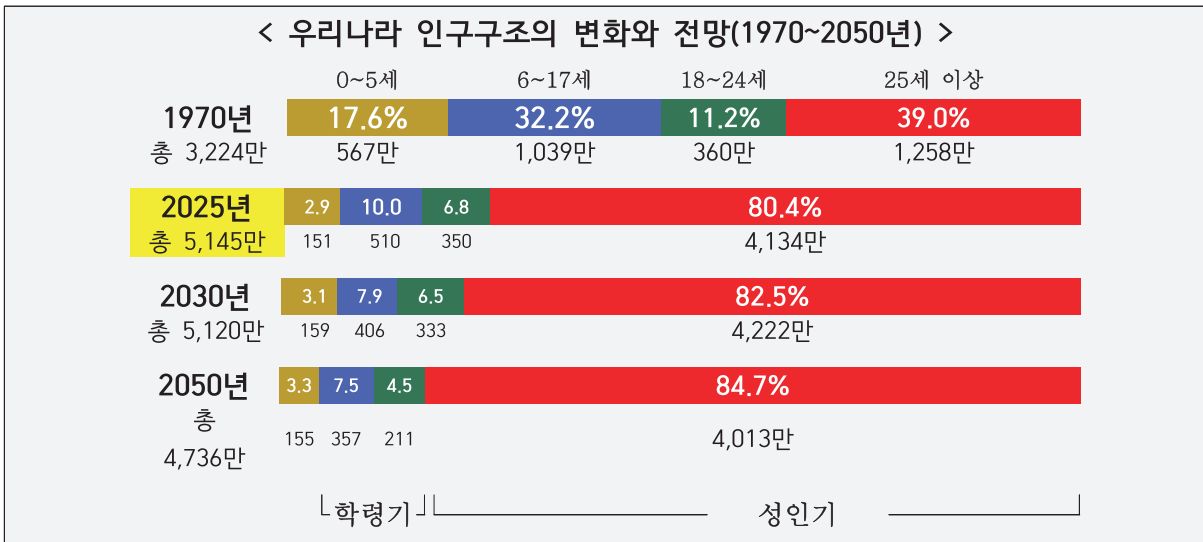
도농격차와 생활권 평생교육에 대한 토론문  
“지방소멸 대응과 읍면동 생활권 평생교육”에 대한 생각

통합적인 접근에서 보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교육

## ‘지방소멸시대의 평생학습정책’에 대한 토론편

이혜진(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발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중심의 생활방식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는 우리의 삶과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3대 인구 리스크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 발표(‘21.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357만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9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의 그림자는 지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유출, 산업쇠퇴 등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개정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고, 연 1조원을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은 인적자원의 축소로 인해 지역과 국가의 생산가능성 및 경쟁력을 낮출 수 있고, 지역사회 붕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사회적 불평등 확대, 세대간 갈등 등과 결합할 경우 총체적 위기를 낳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개인과 국가·사회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일선 교수님은 발표문에서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시대 평생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멸의 의미를 생물학적 소멸, 자살, 근대적 인간의 죽음, 호모 사피엔스의 죽음 등 4가지 차원에서 짚어보고, 이와 대응한 평생학습의 방향을 다양성의 평생학습, 연대의 평생학습, 평생학습대학, '노동'하는 평생학습 실천가로 제시하였다. 지방소멸을 인구감소 측면에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여, 평생교육, 학습자, 지역, 대학교육 및 기관, 활동가 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부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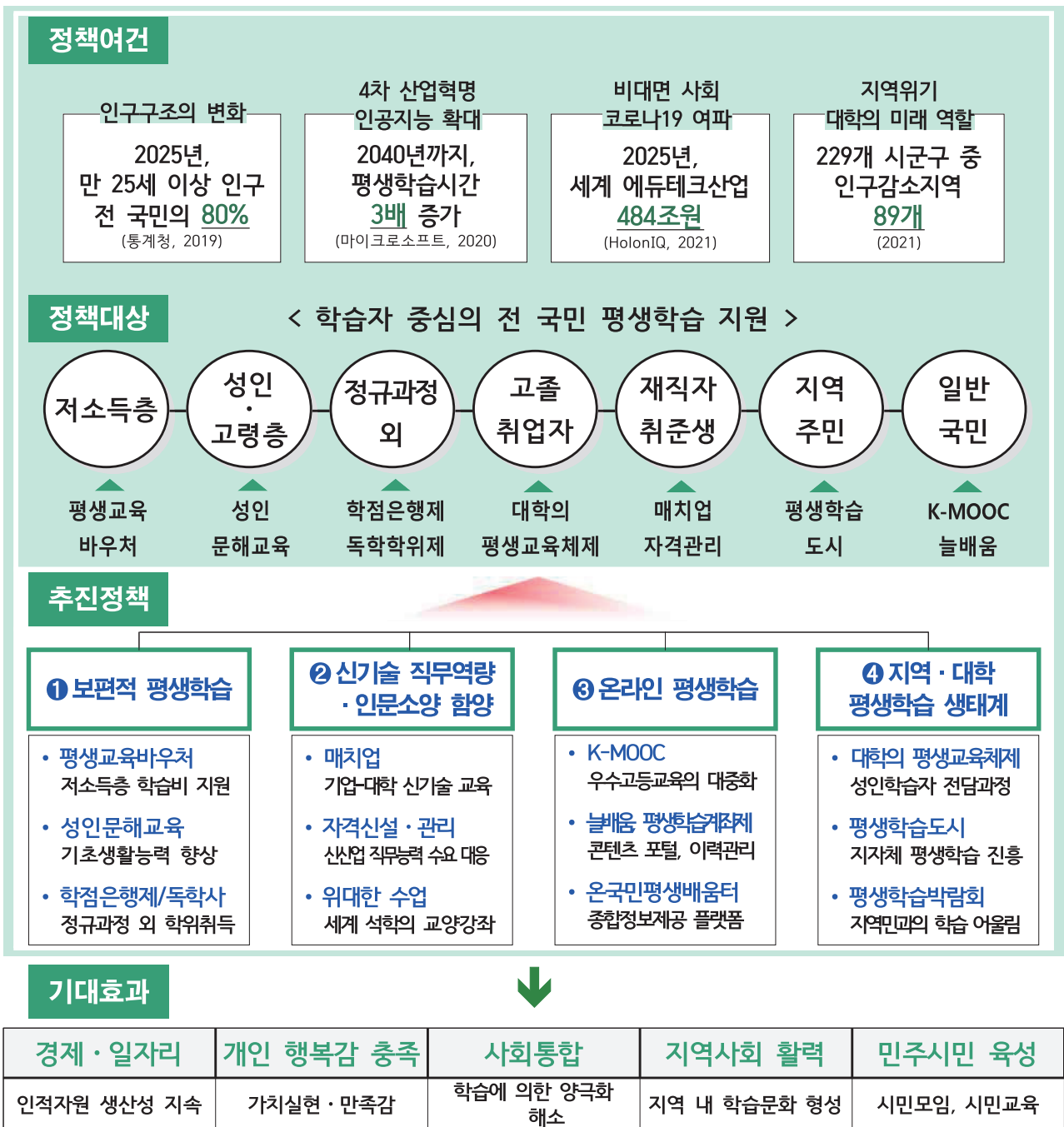
'다양성의 평생학습'에서, 총량적인 인구는 감소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짐에 주목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향상, 다문화 인식 개선, 이중언어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학령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많지 않음으로 지적한다.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지원은 법무부, 여가부 등의 부처에서 주로 담당해 왔지만, 등록/체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교육, 취업 등이 중심이 되어 있어, 이들이 가진 평생교육 수요 등은 반영되지 않거나 기관, 프로그램간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높이는 준비가 필요하다.

'연대의 평생교육'은 인구감소 지역을 살리면서도 대도시에서 인간, 자연, 생명을 더 느끼고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평생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 시민성,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 자원 등을 모아 지역사회를 함께 살리는 한편,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는 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호모 파베르 시대의 도래'는 지방소멸 시대에 평생학습은 머리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장으로 가서 학습자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평생학습 전문가, 실천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인구구조 변화, 기술 변화 등으로 학습자의 특성도, 학습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는데, 이를 직접 파악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이나 지원을 하는 평생교육사 또는 평생교육 실천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관심분야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과 필요한 학습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컨설팅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이나 심화

교육 등을 통해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야 전문성을 보다 높여가는 지원과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통한 사례 축적, 전문가 공동체의 성장과 혁신이 요구된다.

발표자의 발표문에 대한 의견 외에 교육부 차원에서 지방소멸시대 평생교육정책의 키워드를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성인의 역량 강화, 2) 지역사회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3) 온라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 정보 종합 제공, 4) 신기술 직무역량 강화, 5) 인문 소양 함양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 그것이다.



첫째,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한편 만2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인 사회에서 성인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생애단계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 실현 차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 '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20년 성인(만 25-7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0%에서 30.7%로 급감하였는데, 남성, 청년층(25-34세), 고소득자(500만원 이상), 취업자, 수도권 지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비교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에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저소득층 성인 등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의 대상, 규모, 사용가능 기관 및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지원은 두텁게 하되, 국민 누구나 인생의 단계에서 필요한 평생교육을 받고 생애 한 번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설계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평생교육법이 '21년 12월에 개정, 시행 중이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지방소멸시대에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전문)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입학 자원이 줄고, 수도권 대학으로 신,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면서, 연쇄적으로 지방 대학은 위기를 겪고 있다. 청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거주, 근무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등이 일하고 학습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 일자리의 변화로 대학에서 배운 학문이나 학과 지식만으로 평생 직업, 직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성인의 재교육, 전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러한 교육을 충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지원 사업(LiFE) 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참여가 용이하도록, 입학, 교육과정, 학사 운영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기초 지자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하여 전문대를 지역의 평생교육/훈련의 허브로 기능하도록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LiFE 사업에서, 현재 전국의 30개 대학(4년제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성인학습자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130여 개의 학과(전공)를 개설하고, 4,000여명의 신입생 정원을 확보, 높은 충원율을 성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LiFE 사업 참여대학 외에도 많은 대학이 학령기 입학자 외에 성인학습자를 정원 내로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현장 경험이나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의 입학, 학사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학점을 기준으로 입학, 학사운영, 등록금, 장학 제도 등을 바뀌가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

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나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과, 전공 신설, 교육과정 운영, 대학과 기업 현장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학점 인정, 특정 분야나 세부 전공 교육과정을 짧게 모듈화(9~12학점)하고 마이크로 디그리 등으로 인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나 지식을 신속하게 갖추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일수록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교육, 문화, 생활 등 인프라의 부족과 노후화, 생활 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도시일수록 평생학습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21년 기준 평생학습관은 전국에 486개인데, 지역 내 평생학습관이 지역 내 유일한 평생교육 시설인 지역도 31개에 달하며, '21년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시설의 68%, 학습자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인프라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지역의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고도화하는 사업과 읍면동 등 기초생활권에 평생학습센터를 확충하여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의 거점이 되고, 노인 등이 학습, 건강, 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온라인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별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비대면 방식으로 크게 전환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평생학습에서 온라인 학습자의 비중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무형식교육의 형태도 늘고 있다. 접근 가능한 정보가 늘면서 이러한 정보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엄선하여 제공하고, 설명, 추천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학습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기관, 강좌, 방법, 장소, 내용, 결과 활용 등)를 얻고, 학습 관련 설계나 상담을 제공받고, 학습한 결과를 이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늘배움'이라는 평생교육 종합 포털을 통해 시도 등 지자체의 평생교육 강의와 행사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학습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학습 패턴, 관심 분야, 상황 및 희망 진로 등의 데이터에 기반, AI를 통해 강의 추천, 경력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 플랫폼을 올해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결과물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국민 개개인의 학습과 결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대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신산업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산업 구조 전환 등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접하고,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기초를 쌓고 분야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AI, 빅데이터, 미래형 자동차,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개발, 운영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기업에서 채용이나 인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치업(Match-業) 교육을 통해 지방소멸, 노동시장 전환 시대에 변화와 적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신기술 분야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단기간 집중적인 부트캠프 등도 늘고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기업 관계자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멘토링, 현장실습, 문제해결형 학습(PBL)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높이는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교육기관-지자체-SC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높이는 한편, 기업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기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시대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정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정책은 다수의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 및 부처와 관련된 횡적 연계, 중앙-지자체(광역)-기초 지자체-평생교육시설/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종적 연계 등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정책이 중복 또는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연계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평생교육 거버넌스 정비와 함께, 평생교육 관련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는 평생교육법('21.12.9. 개정, 시행)에 근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조사, 분석 범위 결정, 분석을 위한 틀, 체계 마련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시대의 위기에 있지만, 인구 감소나 지역의 축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학교교육 단계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받아 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높이고, 지역간, 지역과 대학간, 개인간 연대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생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2주제-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행정 토론문

## 보편적평생교육실현운동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poolppuri@gmail.com

○ 홍숙희 박사의 발제는 평생교육추진체계의 역사를 짚으면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 환경 미흡,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분절성, 국가평생교육 총괄 기능 취약, 빈약한 재정투자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잘 진단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런 분절성과 빈약한 공적 투자로 인해 비수도권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음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 평생교육행정이 국가, 자치정부와 교육자치가 중복 및 분절, 공적투자 기반 조성 미흡의 문제점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거버넌스 체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원, 지역사무화시 인력 지원 우선을 강조하며 위기 대전환을 위한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권을 위한 영역별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온 홍박사의 진단과 대안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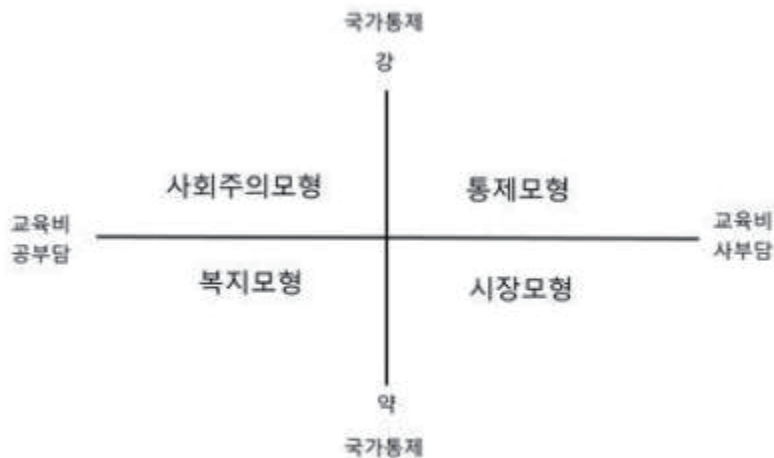
○ 보편적평생교육실현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성찰하게 되는 몇 가지 지점에 대해 고백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잔여적 보충적 보완적 영역으로서 평생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학교교육이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담론과 이론을 만들고 확산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계는 사회적 무지를 깨우치며 평생학습 사회를 주창하면서 사회교육시대를 평생교육으로 전환해왔습니다. 그 동안의 선도적인 노력이 평생교육법을 만들고 전달체계를 만드는 결과를 성취했습니다. 담론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온 사례입니다. 평생교육을 보편적 기본권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학교 중심의 교육 담론을 넘어서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키우는 교육,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전환, 평생학습 주류화를 위한 담론을 키우고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도입에서 평생교육의 주류화 담론을 키워가야 합니다. (담론활동)

두 번째로 평생교육계가 유의미한 사회세력으로서 기능하고 역할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 연대의 구조를 만들고 체계화하는 세력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으로서 보편적평생교육의 주체 세력이 더욱 강하게 형성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구분, 공공영역 재직자 중심의 협력 체계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평생학습기본권 쟁취, 보편적 평생교육의 실현은 역부족입니다. 절실하게 평생학습이 필요 하지만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패를 반복하지만 전진하는 공동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취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평생교육의 정치’를 고민하고 이를 위한 활동가를 키워가야 합니다. 기반이 있어야 세력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노력이 있어야 기반도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이기도 함을 참조해야 합니다.(시민주도형 세력화)

세 번째 보편적평생교육의 경로를 상상하고 그 방향을 견인하기 위한 경로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만 4차 계획 연구에서 언급된 발전 경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림 II-1] 평생교육제도 유형

출처: 김종서 외(2009). 평생교육개론. pp. 190-195.

복지담론의 경우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결을 구도화 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이의 실현 경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 왔습니다. 이른바 복지재정의 조달 방안에 대한 연구와 나라별 특징에 대한 검토 속에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현과정의 설계에 대한 공감을 확대해 왔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로 유형화하고 단계적 접근론이 나왔습니다. 정당에 따라

견해차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로 설계에 따라 서서히 한국사회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 4차 기본계획연구에서는 위 그림처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검토한바 있습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은 과거에는 통제모형의 성격이 강했다가 점차 부분적으로 복지 모델과 시장 모델이 강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평생교육을 위한 최선의 모델이 무엇이고 현실적 선택이 무엇인지 정돈하고 단계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도개선 활동에 소수가 동원되고 좌절하는 사이클의 반복으로 인한 피로감과 불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전망을 갖지 못한 활동만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정책 결정권자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대안적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돈치 않고 추상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대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전략적 경로의 설정)

○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서 실질적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장해온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당면 과제를 치열하게 수행하면서 방향도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에 평생교육분과가 만들어지고 교육부가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자치행정 차원에서 평생교육인지적 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 정부의 실국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및 유관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상위 정부의 칸막이를 따라 각자도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치정부 내에서도 평생교육관련 사업의 통계를 작성하고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평생교육심의위원회와 같은 통합조정위원회(고용노동부는 신규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정책조정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음, 전자정부 관련 사업도

이런 통합 조정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를 거치도록 만들어 평생교육인지적 행정의 기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평생교육부서의 사업이 평생교육이 아니라 모든 부서, 산하 공공기관, 학교의 평생교육사업의 통합 조정되는 길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도 가능할 것입니다. 통계의 작성과 분석, 사업심의 조정 과정을 거쳐 모든 공공사업에서 평생교육인지적 평가와 사업을 만들어감으로써 복지와 교육, 일자리와 교육, 사회문제 해결과 교육의 분리를 극복하고 평생교육의 실질적 효능감을 제고하는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필요한 평생교육 관련 정책제안을 모으고 숙성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평생교육 유권자 운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시기 교육관련 공약의 90%를 상회하는 것이 학교 교육 관련이었고 평생학습관련 공약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평생학습도지 지정, 평생학습관 설립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평생교육, 지역별 계층별 수요에 맞는 정책 수요에 대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문외한일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디지털평생학습캠퍼스도 필요하고 마을기반 평생학습관도 필요합니다. 이런 공약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안 받고 연구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숙성해서 지역별 맞춤 공약이 만들어지도록 지방선거평생교육정책뱅크를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 후보자와 정당에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회신 받는 유권자운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지방선거정책뱅크: 시민제언-정책숙성-정책제안)

○ 초대해주셔서 좋은 성찰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이 우리 사회의 혁신과 국민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보편적평생교육실현범국민운동을 계속할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생교육과 연계된 기관, 이해관계자, 학습자가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과 읍면동 생활권 평생교육”에 대한 토론

양희준(한국교육개발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구자인 소장님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발표자는 지역정책의 근본과제를 ‘칸막이 속에서 전달되는 정책(사업)’,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정책’, ‘시군구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 부족’,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체감형 주민참여”를 촉진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 지역 발전의 핵심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군구 단위의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제도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자의 핵심 아이디어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발표자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급한 과제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 지역 주도형, 주민주도형 발전계획 수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공론장 확대”, “시군구 단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읍면동 사회혁신의 실험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혹은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 제안의 초점은 읍면동 단위 즉, 생활권 단위에서의 주민 주체, 주민 주도의 혁신을 추구하는데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읍면동 단위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군구, 광역 더 나아가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한 언급도 하였는데, 시군구 수준에서는 “통합형 정책위원회”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광역단위에서는 “정책연수원의 설립과 운영”을,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발전특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군구, 광역, 국가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그 위에 읍면동 단위의 주민 주도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의 활로도 개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자도 [자료2]에서 말하고 있듯 ‘지역마다의 강력한 학습운동’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학습조직을 만들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때, 지역의 많은 문제들이나 과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충남 홍성 홍동면과 장곡면 일대에서 목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활동의 사례들은 지역에서의 평생학습 실천이 마을의 활력 회복과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해 갖는 효과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이 갖는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발표자의 논의에 적극 공감하면서, 오늘의 토의 주제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이 갖는 가능성이 어떻

게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힘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간략한 논의를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개념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능성 혹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평생’(lifelong)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평생교육이 제시하는 희망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특정 시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이제는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이디어입니다만, 4~50년전만 하더라도 교육은 곧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의 학교급에 대해서는 ‘종결교육’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이나 ‘학습’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둘째, 더 나아가, ‘평생교육’은 교육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형식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포함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학교교육이라는 ‘형식교육’ 외에도 학교 밖의 기관(institu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 비단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교육’에까지, ‘평생교육’은 우리 일상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셋째, 또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의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 혹은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혹은 ‘배우는 행위’로의 관심 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현상을 다시 바라보면, 교육자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피교육자의 변화’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본질적인 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학습자가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배우는 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움’, ‘학습’이 핵심입니다.

이상과 같은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의 개념적 속성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관점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매개된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에는 ‘저출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있습니다. 결국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문제이고, 가장 활발한 인구 유출은 학령인구와 2~30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유출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지역에서의 삶’과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비교,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상대적 평가 절하를 여러 발화점 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서 도시로 가면 성공이고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원래 살던 지역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열패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의 기저에는 ‘지역에서의 삶’을 실패한 삶으로 보거나 성장, 발전의 가능성이 적은 삶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무엇보다 ‘지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방에서의 삶’에 대한 관점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이 갖는 고유성, 가능성, 그 자체의 가치를 읽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지방의 사례들은 그 안의 개인 혹은 조직, 집단이 이루어낸, 그 지방 고유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재인식과 발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근래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놀라운 평생

학습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들의 삶과 도전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주체의 학습을 통한 전환, 전환적인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을 이끌어 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공동체의 수준에서도 학습이 이끌어 낸 관점 전환의 사례들은 국내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충남 홍성 홍동면의 사례도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양병찬, 2008; 양병찬 외, 202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의 주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자신이 살아갈 곳에 대한 재인식, 가치 발견을 이룰 수 있다면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이 쉽게 갈 수 있는 읍면동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마치 초등학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듯이 주민들의 평생학습공간도 생활권 내에, 접근이 편하고 쉬운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학습의 읍면동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종래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들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매우 동감합니다. 가까운 곳의 평생학습센터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도 만날 수 있고, 아이들도 잠시 맡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은 그 곳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도서관도 있어서 책도 볼 수 있다면, 학습동아리 모임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활발한 평생학습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지방소멸’이라는 풀기 힘들어 보였던 지역의 과제 해결에도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

- 양병찬(Yang Byung Chan).(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충남 홍동 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양병찬, 최정윤, 오나비나, 김미정, 이서영. (2021). 지역공동체의 마을교육체계 분석 - 홍동·장곡지역 실천에 대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 평생교육학연구, 27(3), 1-33.

통합적인 접근에서 보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교육**



순천시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 평생교육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전 생애,  
학교 및 사회전체 전반의 교육 통합

-Lengrand-



-Peter Jarvis, life-learning model-

## 마을에서의 평생교육

정책 : 학습동아리, 학습마을, 행복학습센터, 학습등대(남양주), 학습카페(고양시)

- 지역의 유휴공간 또는 유관기관 개점화
- 배움 목적으로 한 정기모임
- 마을활동가(학습매니저, 리더)
- 학습비전 및 계획 수립 및 운영

마을  
(공간)

## 마을 교육공동체

정책 :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지역화교육과정

- 지역의 유휴공간 또는 유관기관 개점화
- 아이, 학생 교육에 대한 논의 정기모임
- 마을활동가, 학교 교사 등
- 우리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겠다 하는 비전, 계획 수립 및 운영

마을 안에서 지향점, 주체,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공동체의 비전이 아이 교육에 있으면 마을교육공동체가 된다



마을공간은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형 마을배움터"로  
구상되어야 한다.

## 순천시 별량마을교육자치회

교육에 관심있는 주민+학교+학부모+마을활동가+주민자치회+읍면동행정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임(주민자치회 교육분과)

- (성인)막걸리 만들기, 생태해설, 음악밴드, 공예, 그림

막걸리 판매수익, 학생활동지원 투입 (선순환)

- (학생) 학생 청소년 마을학교 운영, 청소년정책마켓, 3개 학교 교육과정 18개 정책 제안

학생제안 4개 정책 주민참여예산 반영(3천5백만원) (선순환)

- (주민자치, 거점공간) 지역유휴공간 및 학교공간개발 주민복합화, 주민공공서비스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돌봄, 문화, 평생교육 다 정책 연계



우리 별량이  
어떤지도 어떤도 함께하든  
최유가능할 마운하  
리베이 될 수 최유록  
전망한 상상하  
머리 사람독이 언필되실대  
기여할수있는  
공간이 되신으면 합니다.

## 사각지대정책발굴



## 사각지대정책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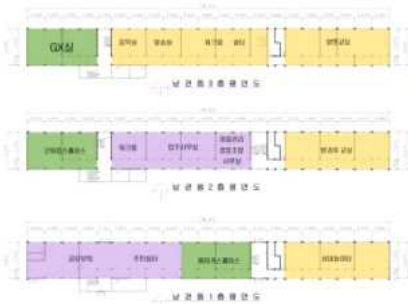
# 연계와 협력이 만든 사례 “남초등 학교재생”

※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

담당부처	주요사업	주요내용
교육부	지역별 교육지원청	학교별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공동체로서의 발전 촉진
행정부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노후주택지역에 포함된 구도심을 지역 주민과 함께 재생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 추진

2020. 3. 25.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A-2. 대상시설 연계사업



## 사회적 신뢰가 쌓이는 지역사회

송산초등학교  
**송산돈까스나눔**  
수익금은 전액 송산 친구의 아버지 치료비용입니다.

판매가: 만원  
주문 마감일: 11월 11일(금)  
송산가족들이 재료준비 부터 직접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번 송산돈까스나눔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으신 아버님의 치료비용을 위해 진행 되고있습니다. 1회 수익비로 1000만원이 사용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산 가족이 돕기 위해 송산돈까스나눔을 합니다. 사람의 전담을 위해 함께 해주사기 바랍니다.





학교혁신,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다루는 문제의식이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하다. 영역의 통합이 마을에서 일어나게 해야한다.

## 2023 순천 미래교육비전

### 시-교육지원청-시의회 교육협력비전

1. 학교와 마을이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
2. 학생, 시민 모두 삶의 주인이 되는 교육 정책
3. 경계를 넘는 교육네트워크, 도시 전체 배움터 조성
4. 지역특화 교육 과정으로 로컬영 인재 육성
5. 개인을 넘어 지역의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실현



#### 하나.

학교와 마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 대학이 힘을 모아 마을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을을 사랑하는 아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을을 키워가겠습니다.

#### 둘.

더 나아가 마을과 마을이 만나면 경계를 넘어 사람과 공간이 만나면 마을의 배움터는 도시로 넓어집니다  
모두가 함께 도와 평생학습체제를 만들어가면 순천시 도시 전체는 큰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 셋.

순천의 배움터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를 더 깊이 배울 수 있게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태와 역사를 배워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시의 미래입니다.

#### 넷.

또한 시민들도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마을과 도시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민주시민으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다섯.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 모두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탐구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여 시민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길, 평생학습은 도시의 미래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 영역을 '포함', '통합'한 "도시의 평생교육 리브랜딩 필요"



생태, 경제, 문화예술, 역사, 주민자치 등 지역평생교육동력을 학교교육에 연결하는 것

##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메모

감사합니다.

주민의  
삶의질과  
보편적  
평생학습